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에 관한 연구

강마야(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kmaya@cni.re.kr)

*충남연구원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 자문(충남먹거리연대 김오열 집행위원장,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상진 회장,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상임이사, 가나다 순)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함.

이번 연구는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방향에 따라 컨트롤타워로서의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 근본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제안함에 주요 목적이 있다.

CONTENTS

- 1. 서론
 - 2. 추진경과
 - 3.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동향
 - 4.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향
 - 5. 결론
- 참고문헌

요약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음.
 - 재무적경제적사회적 타당성 재검토 결과,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일부 수치 과다추정 등의 오류가 있어서 비용편익 재분석 필요, 기존 기능의 대체 부분을 편익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경제적 타당성 있음' 판단은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
 - 이용수요 설문조사 결과,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필요하다는 의견이 10개 시군, 시군 센터 건립 이후 광역 센터 건립 추진순서로 응답한 의견은 8개 시군, 일부 품목 등 이용의향이 응답한 의견은 7개 시군으로 나타남.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의 원칙방향은 15개 시군 먹거리통합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민관 협치행위를 기본으로 하고 최상위로 설정함.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소프트웨어 기능과 역할은 컨트롤타워로서 민관 거버넌스 기구 역할이 가장 중요, 하드웨어 기능과 역할은 15개 시군 내 통합물류 및 유통업무 담당, 먹거리 안전성 시험분석관리, 교육체험회의소통 공간, 참여자 인증체계 구축 지원, 소비와 홍보 등임.
 - 충청남도는 시군 간 네트워크-통합-조정 등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시군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관리 필요함. ① 민관 거버넌스에 기초한 사업실행, ②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 식재료 공급체계 확립, ③ 품목별 또는 유형별 시군과 광역 사업조직 운영 필요, ④ 시민 계층별 먹거리 보장체계 강화 등임.
 - 충남 광역과 시군 간 물류기능 역할 분담은 물류기능은 매우 실무적이고 숙련도를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직영보다 위탁(외부용역)이 높을 것으로 판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15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기존 시군별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역할로서만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식은 위탁운영 방식(하드웨어 소유주체는 충청남도, 운영주체는 광역 민간단체 연합체이거나 특정시군 등 여러 형태), 직접운영 방식(공사, 공단, 재단법인 등 형태), 공동운영 방식(충청남도과 특정 시군 공동 분담) 등이 있음.

0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수립 이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해 오던 중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원안대로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과거 도 농정의 사업실패 경험사례(도비가 투입된 천안중부물류센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등)로부터 교훈을 얻었던 바, 이에 기인하여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타당성 분석결과(2019년 연구용역)를 비롯하여 충청남도의 광역먹거리통합정책 추진과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 연구의 목적

-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방향 구상 모색과 더불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 이번 연구는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방향에 따라 컨트롤타워로서의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에 관한 재정립 등 근본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제안함에 주요 목적이 있다.

● 연구자의 의견

-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 광역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 아닌 먹거리와 관련한 민관 협치 행위를 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 더 적절하고 시급한 것이라고 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 절차가 완료되었기에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재고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그러한 한계점을 뒤로 하고 건립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건립한다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세부 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다.
- 다만, 연구자가 특정 대안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을 제시하여 충청남도 등을 비롯하여 관련 주체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용어의 의미나 약축 사용에 유의가 필요하다. 예. 푸드플랜은 먹거리통합정책, 먹거리보장 기본계획을 통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혹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광역 센터 및 시군 센터로 약칭 등

● 연구의 내용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향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방향 모색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 재정립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기능과 역할 정립에 따른 현행 조직운영 방향 제시

● 연구의 체계(〈그림 1〉 참고)

- 연구 내용은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방향,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 운영방향,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추진방향 순으로 도출한다.
- 연구 방법은 자료수집 및 선행자료 검토, 전문가 및 행정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였다.

〈그림 1〉 연구의 체계

| 연구 방법 | 연구 내용 | 세부 사항 |
|-----------------------|-----------------------------------|---|
| 자료수집 및 선행자료 검토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동향 |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체계 · 충남 먹거리보장 기본계획 · 시군 먹거리통합정책 현황 |
| ↓ | | |
| 전문가 및 행정 의견수렴 선행자료 검토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 운영방향 | · 재무적·경제적·사회적 타당성 재검토 결과 요약 · 이용수요 설문조사 결과 · 기능과 역할, 방향 재정립 · 조직 및 운영주체 구상방안 |
| ↓ | | |
| 전문가 및 행정 의견수렴 선행자료 검토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추진방향 제안 | · 종합 결론(실행체계 및 단계별 추진과제) |

주 : 저자 작성함.

● 연구의 기대효과 및 정책활용

-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및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내용을 재점검함으로써 충청남도의 먹거리관련 정책방향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 근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점은 ① 좋은 먹거리를 충남 도민과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제공 가능하여 먹거리복지 실현, ② 15개 시군의 친환경 농업인에게 다양한 기회 부여, ③ 계약재배 및 조직화 유도, ④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기에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전국 롤모델로 확장할 가능성, 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지역발전에 큰 정책 업적, ⑥ 먹거리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계약재배를 통해 먹거리 과잉분과 부족분을 통합조정·조율해서 도내 전 지역에 공급할 수 있다.

02 추진경과

1.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현황¹⁾

- 정책목적 :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지역식품 선순환체계 구축
 - 먹거리통합정책의 국가정책화에 따라 제도화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공공급식을 비롯한 지역식품 이용확대 및 선순환체계 구축이다.

-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등 거버넌스 체계
 - 설립 : 2013년 12월 16일 설립(비상임 센터장 김호 교수, 운영위원 12명)
 - 역할 : 학교급식 정책개발 및 자문(분기별 운영위 개최)

- 시·군 학교급식 지원현황(〈표 1〉, 〈표 2〉 참고)
 - 추진상황 :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2019.3.5.기준, 학생수 사업비 반영)
 - 추진계획 : 사업지도 점검(2019.9.1.기준, 2학기 학생수 사업비 반영)
 - 학교급식 공급확대 추진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지원(5,446백만 원)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정립 매뉴얼 제작(800부, 18백만 원)
 -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10개소, 300백만 원)
 - 기대효과 :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재료 등 안전 먹거리 공급을 통한 건강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식품순환체계 확립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 협조사항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1) 자료 : 충청남도(2019), 농어업인 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2019년 3농정책위원회, 회의자료집, pp.10-12.

〈표 1〉 시·군 학교급식 지원현황(2019년 기준)

| | |
|----------------|---|
| 유치원 | -지원규모 : 495개원 26,659명, 10,182백만 원, 병설 190일(단설·사립 220일) -지원기준 : 도 20%, 시·군 30%, 교육청 50% |
| 초·중·고 특수학교 | -지원규모 : 735개교 240,271명, 126,316백만 원, 190일 -지원기준 : 도 40%, 시·군 60%(교육청은 인건비·운영비(118,140백만 원) 편성) |
| 친환경급식 식재료지원 | -지원규모 : 1,230개교 266,930명, 22,986백만 원, 190일(220일) -지원기준 : 도 30%, 시·군 70%(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

자료 : 충청남도(2019), 농어업인 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2019년 3농정책위원회, 회의자료집, pp.10-12.

〈표 2〉 시·군 학교무상급식 식품비·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현황(2019년 3월 5일 기준)

|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2019년 추가) | 특수학교 (2019년 추가) | |
|-----------------------|----------------------------|--|---|---|---|--|
| 학 교 수 | 495개원 | 421개교 | 188개교 | 119개교 | 7개교 | |
| 학 생 수 | 26,659명 | 122,492명 | 56,050명 | 60,686명 | 1,043명 | |
| 급 식 식 품 비 | 소요예산 (식품비) | 10,182백만 원 도 2,036 시군3,055 교5,091 (※교육청 식품비) | 51,435백만 원 도 20,574 시군 30,861 (※교육청 인건·운영비) | 31,457백만 원 도 12,583 시군 18,874 (※교육청 인건·운영비) | 42,775백만 원 도 17,110 시군 25,665 (※교육청 인건·운영비) | 648백만 원 도 259 시군 389 (※교육청 인건·운영비) |
| | 급식단가 | 1,700원 | 2,219원 (2,140~2,580) | 2,885원 (2,800~3,260) | 3,400원 (3,360~3,800) | 3,340원 (1,700~3,800) |
| | 급식일수 | 단설·사립 220일 병설 190일(1식) | 190일(1식) | 190일(1식) | 190일(1식) | 190일(1식) |
| | 1인당 연간 지원액 | 단설·사립 374,000원 병설 323,000원 | 421,610원 (인건비 포함 896,871원) | 548,150원 (인건비 포함 948,982원) | 646,000원 (인건비 포함 1,117,623원) | 634,533원 (인건비 포함 1,523,734원) |
| | 친 환 경 식 재 료 | 소요예산 (식재료) | 1,677백만 원 도 503 시군 1,174 | 9,042백만 원 도 2,713 시군 6,329 | 5,125백만 원 도 1,537 시군 3,588 | 7,046백만 원 도 2,114 시군 4,932 |
| 급식단가 | 280원 | 390원 | 470원 | 560원 | 494원 | |
| 급식일수 | 220일(1식) 190일(병설) | 190일(1식) | 190일(1식) | 190일(1식) | 190일(1식) | |
| 1인 연간 지원액 | 61,600원 53,200원 | 74,100원 | 89,300원 | 106,400원 | 93,796원 | |

자료 : 충청남도(2019), 농어업인 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2019년 3농정책위원회, 회의자료집, p.11.

● 충남 내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표 3〉 참고)

- 천안시 : 쉼 고교 식재료 공급 위한 2센터 건립 추진 (2020년 7월 준공 예정)
- 센터 소분·피킹장 부족으로 고등 3개교(23개교 중) 식재료 공급 중

- 금산군 : 군 여건에 맞는 센터 유형 모색을 위한 지역여론 형성
- 당진시·태안군 : 2019년 3월 센터 운영 방식 변경 (위탁 → 행정직영)

〈표 3〉 충남 내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13개 시·군)

| 시군명 | 운영 현황 | 시군명 | 운영 현황 |
|-----|---|--------------|---|
| 천안시 | 2016년 3월 개장(111개교, 65천 명) (전 품목/천안조공 위탁) | 공주시 | 2016년 4월 개장(88개교, 13천 명) (전 품목/우성농협 위탁) |
| 보령시 | 2017년 3월 개장(84개교, 11천 명) (전 품목/시 직영) | 아산시 | 2013년 3월 개장(135개교, 47천 명) (전 품목/아산원예농협 위탁) |
| 서산시 | 2018년 3월 개장(98개교, 22천 명) (전 품목/시 직영) | 논산시 (계룡시) | 2016년 3월 개장(111개교, 22천 명) (전 품목/논산계룡농협 위탁) |
| 당진시 | 2011년 3월 개장(89개교, 20천 명) (전 품목/시 직영) | 부여군 | 2015년 5월 개장(67개교, 6천 명) (전 품목/군 직영) |
| 서천군 | 2018년 3월 개장(54개교, 5천 명) (전 품목/군 직영) | 청양군 | 2014년 4월 개장(33개교, 2천 명) (전 품목/군 직영) |
| 홍성군 | 2014년 3월 개장(69개교, 13천 명) (전 품목/군 직영) | 예산군 | 2017년 3월 개장(67개교, 8천 명) (전 품목/군 직영) |
| 태안군 | 2017년 3월 개장(60개교, 6천 명) (전 품목/군 직영) | 금산군 계룡시 | 준비 중 계룡시는 논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

자료 : 충청남도(2019), 농어업인 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2019년 3농정책위원회, 회의자료집, p.12.

● 충남 내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표 4〉 참고)

- 충남 내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은 1개소(청양군) 완료, 3개소(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추진 중에 있다.

〈표 4〉 충남 내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

| 구분 | 아산시 | 서산시 | 청양군(완료) | 홍성군 |
|------|--------------------------|----------------------------|--------------------------------|-----------------------------------|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 2020년~2022년 | 2018년~2021년 | 2021~2022년 |
| 규모 | 1,890㎡ | 1,680㎡ | 1,935㎡ | 5,097㎡ |
| 예산액 | 66억 원 (국18, 도12, 시36) | 36억 원 (국16, 도6, 시14) | 71억 원 (국10, 도17, 군44) | 122억 원 (국61, 도18, 군43) |
| 시설내용 | 통합물류, 공공조리장, 교육장 | 선별·전처리장 저온저장고, 물류피킹장 | 물류, 가공센터 전처리시설, 안전성분석실 | 물류센터, 가공센터 전처리시설, 친환경비즈니스센터 |
| 추진상황 | 투자심사 승인 공공건축 심의 | 예비사업자선정 2021년 착공 | 물류, 가공센터 준공, 그 외시설 내년 준공 | 기획설계용역 발주 주민설명회 개최 세부계획수립 중 |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 2020 농정 대전환 전국 순회 원탁회의 (참고6)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p.10.

2.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개요²⁾

● 당초 계획 상 사업 개요(<표 5> 참고)

-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내곡리 174-4(구 남성중학교 폐교 부지)
- 사업기간 : 2019년~2022년(당초 4년 간) → 2021년~2023년(변경 3년 간)
- 사업비 : 185억 원(국비 50%, 도비 50%)(부지매입비 10억 원, 건축시설비 175억 원)
- 사업규모 : 부지 21,232㎡, 건물 5,963㎡ 등 약 1,800평 규모
- 주요시설 : 친환경유통센터, 직거래 물류센터, 지역가공센터, 광역푸드인증센터, 먹거리 교육센터(시민교육체험관), 식농체험장, 로컬푸드 식당, 사무실, 회의실 등
- 운영조직 : 재단법인 「충남푸드통합지원센터」 (5팀 20명)
- 주요기능 : 공공급식 식재료 수급체계 및 통합물류 구축

<표 5>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내용

| 층별 | 시설내용 |
|------|------------------------------|
| 지하1층 | 주차장, 전처리시설 |
| 지상1층 | 친환경유통센터, 직거래 물류센터, 친환경매장 |
| 지상2층 | 먹거리교육센터, 푸드인증센터, 로컬푸드식당, 사무실 |
| 옥상 | 식·농체험교육장, 카페 |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자료(2020.09.03.), p.1.

● 그동안 추진경과³⁾

- 기본계획 수립(2018.9.) → 투자심사 승인(2018.9.) → 공모·대상지 선정(2019.6.) → 먹거리보장 기본계획 수립(2019.9.) →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제정(2019.12.) → 정책진단(광역먹거리센터 재검토 필요, 2020.3.) → 대체사업 제안(2020.10.) → 도지사 면담(2020.11.)

● 추진 현황(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⁴⁾

- 부여군은 2019년 6월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의 핵심인 충청남도 광역먹거리지원통합센터 건립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했던 행정 후속절차

2)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 설명자료,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문가&행정과의 간담회 발표자료(2020.11.19.).

3)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 2020 농정 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회의 (참고6)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p.10.

4) 자료 : 김기서(2020), 건강하고 효율적인 충청남도 무상급식 운영·관리에 대한 제언, 충청남도의회 제11대 제321회 (정례회) 제1차 5분발언 회의록(2020.06.10.).

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 2019년 10월 부여군은 15억 원을 들여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부지를 매입, 충청남도에 장기 무상임대 계획 수립, 전력시설과 통신관련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접공사 마무리, 지방도 611호와 인접한 확포장공사 등 기반시설 준비 중이다.
-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로드맵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예산 확보,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먹거리위원회를 통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주체 확정하는 단계, 2021년에는 건축공사설계 공모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10월 완공하기로 되어 있다.

3.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기별 추진경과⁵⁾

● 2018년

- 19대 대선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로 ‘국가 및 지역푸드플랜 수립’ 선정(2018년 1월)
- 농식품부에서 광역 유일의 먹거리통합정책 선도 지자체 선정(2018년 2월)
-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총 연구용역비 2억 원 예산 투입(국비 1억 원, 도비 1억 원)
-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수립 완료(2018년 7월 ~ 2019년 3월)
 - [충남 먹거리 실태조사 및 광역 역할 등 지역 푸드플랜 수립](#)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2018년 9월)
- (투자심사)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국비확보 조건부 승인(2018년 9월)

● 2019년

- 충남 푸드플랜 연구용역 도출 결과, 푸드플랜 실행체제로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실행과제로 선정(2019년 3월)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대상지로 부여군(남면) 입지 선정 완료(2019년 6월)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에 따른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2019년 7월)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당초 계획(2019년 3월)
 - [타당성 조사\(2019년 8월\), 재단설립, 실시설계\(2020년 12월\), 건축시공\(2021년 6월\), 준공\(2022년 10월\)](#)
- (기본계획)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계획 수립(2019년 9월)
 - [충남 푸드플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등을 수립](#)
- (조례제정) 관련근거로서 ‘충청남도 먹거리 공공급식 지원조례’ 제정(2019년 4월),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제정(2019년 12월)
 -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 마련](#)

● 2020년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 계획 수립 추진(2020년 연초)
-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정책진단 및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2020년 3월)

5) 자료 : 1.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 설명자료,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문가&행정과의 간담회 발표자료(2020.11.19.).
2.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 2020 농정 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회의 (참고6)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p.9.

- 관련 계획 재검토(수요예측 및 공론화 등), 주요 선행과제, 연차별·단계별 추진방안, 정책추진 사전 검토사항 등 효율적 추진방안, 충남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정책관점을 재정립, 수정·보완, 부여군 대체사업 발굴 검토(부여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단지 관련 업무협의)
 - 충남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세부 추진계획 수립(민관 거버넌스 구축, 먹거리통합정책 공론화,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 광역 센터 건립 설계비(8.6억 원) 2회 추경예산 편성, 예산확보 반영(2020년 6월)
- 도의원 및 부여군 의장 도지사 접견(2020년 8월) : 도 의회 의원(2명), 부여군의회의 의장 도지사 면담, 도 팀조직 현장 근무 및 부여군 현장 및 주민들과 소통 요구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회의 개최(2020년 9월)⁶⁾
-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의 실행체제로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논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정책발전 방안 모색
 - 구성은 12명(의회, 전문가, 기관단체, 행정실무자 등), 운영은 분기 1회(상황에 따라 임시회 개최)
 - 주요기능은 광역먹거리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재검토, 지역실정에 맞는 광역 센터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합리적 방안 도출, 대안사업 발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연구용역결과 수요예측이 과다하고 각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 광역 센터 이용 저조가 우려되며 과거실패사례를 볼 때 다른 합리적인 대안 검토 중
- 부여군에 대체사업 제안(2020년 10월)
- 부여군 농업특성을 반영, 친환경농업 중심 융복합사업 제안(유기농사업+친환경농산물 종합처리센터+서울시 부여농장)
- 부여군수 도지사 접견(2020년 10월)
- 먹거리센터는 공적인 영역으로 기존 공공급식처 확보로 적자가가능성 적음, 오히려 대체사업인 유기농사업이 신규시장 개척 부담 등 실패 위험
 - 시군 센터 지역 산 35% 공급으로 광역 센터가 부족량 공급 상호보완적
 - 도 직영 어려우면 공동운영 또는 부여군에 위탁 제안(책임경영가능)
 - 적자 발생 시 적자폭도 부담할 것이고 재단설립 필요 없고 운영팀으로 충분, 그리고 유통노하우가 많아 부여군 책임운영도 가능
 - 부여군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투자해야 하며 어느 정도 손실이 있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함을 주장
- 충청남도과 부여군 실무자간 합의(2020년 11월 12일)
- 충청남도는 H/W건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업지침 마련, 운영팀 인력파견,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시군 연계와 작부체계 구축 등 역할 수행
 - 부여군은 H/W건립(소유주체)과 운영주체, 시설장비 위탁(부여군 조공법인 혹은 부여 친농연), 재산관리 주체 등 역할 수행
 - 관련기관 협의 및 조정으로 합의안 마련

6)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자료(2020.09.03.), p.6.

- 사업 기본방침 결정(추진방향, 사업 규모 및 기능, 시설내용, 예산 확보방안, 운영관리 등)
- 관련 연구용역 추가실시, 부여군과 협약체결, 최종계획 확정, 사업 시행

03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동향

1.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체계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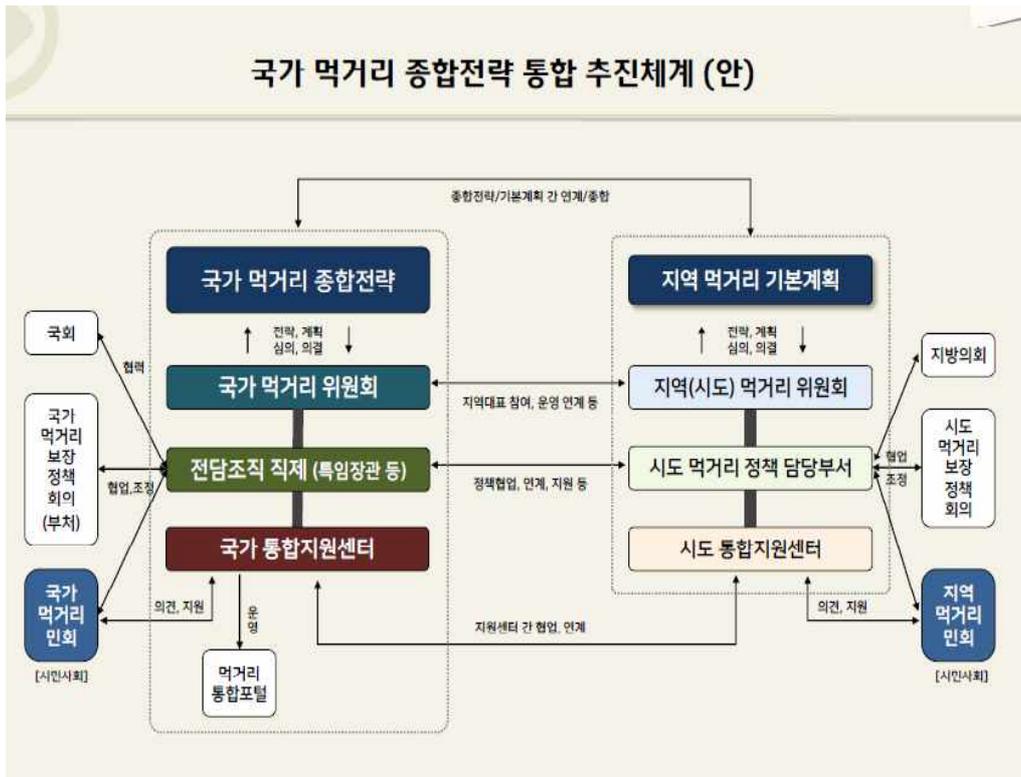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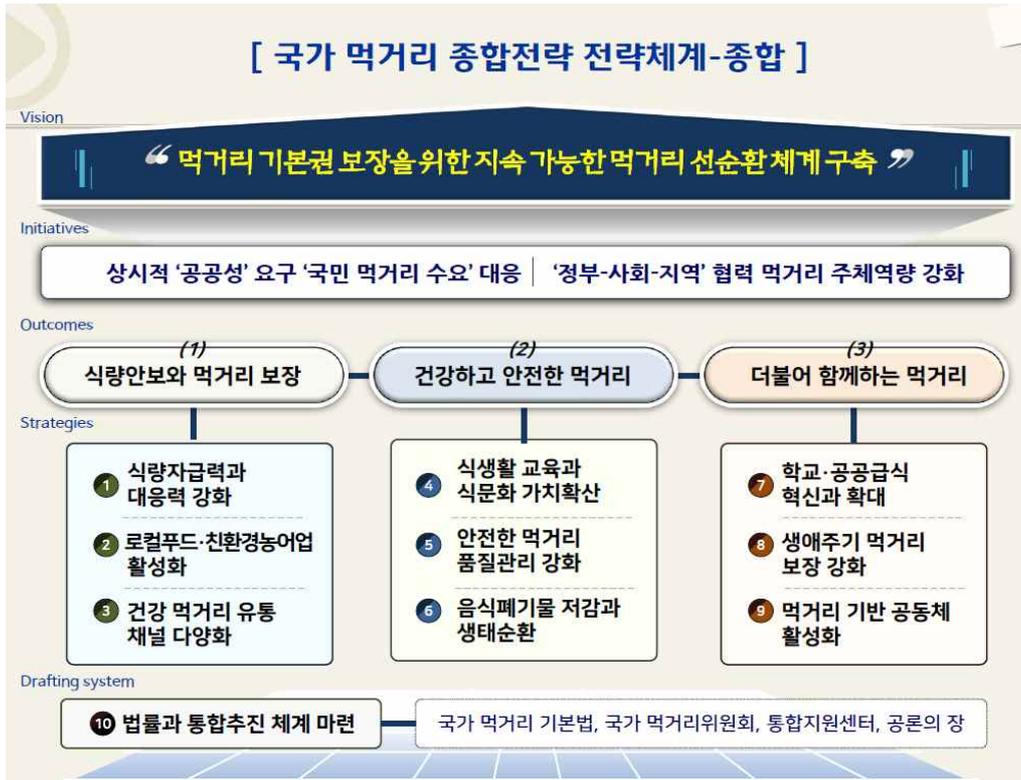
〈그림 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체계

| | | |
|-------------------|--|-------|
| 비전 |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 |
| 목적 | 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 건강한 식생활 실천 지원 | |
| | ② 식량안보와 안정적 공급 : 환경·기후변화 등 먹거리 생산여건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 |
| | ③ 더불어 함께하는 먹거리 : 먹거리 공공성 강화로 공공급식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동체 중심의 지역먹거리 확산 | |
| 과제명 | | 주요 내용 |
| ① 식생활교육·식문화 가치확산 | 사람중심 맞춤형 식생활교육, 농어업·환경의 식생태 교육, 지속가능 식생활 실천기반 강화 | |
| ② 안전한 먹거리 품질관리 강화 | 먹거리 생산·유통 안전성 강화, 건강·안전 식생활 개선,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
| ③ 음식폐기물 저감과 생태순환 | 먹거리 손실 저감 활성화, 먹거리 폐기물 재활용촉진 먹거리 생태적 순환체계 지원 | |
| ④ 식량자급력과 대응력 강화 | 먹거리 안정 자급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연계, 위기대응 먹거리 매뉴얼·지표 마련 및 관리 | |
| ⑤ 로컬푸드·친환경농어업 활성화 | 로컬푸드·친환경농어업 가치확산,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체계 구축, 안정적 유통경로 확대 | |
| ⑥ 건강 먹거리 유통채널 다양화 | 지방도매시장 기능·역할 강화, 적정 공급사슬 체계 구축, ICT기반 공동물류 인프라 구축 | |
| ⑦ 학교·공공급식의 혁신과 확대 | 학교급식 기초-광역-국가 협력·공급체계 강화, 공공급식 생산-소비연대와 물류체계 구축 | |
| ⑧ 생애주기 먹거리보장 강화 | 농식품바우처제도 전면도입, 영양플러스 사업개편 및 확대, 청년 커뮤니티 푸드지원 | |
| ⑨ 먹거리 기반 공동체 활성화 | 먹거리 연계 커뮤니티케어, 생활SOC먹거리 기반확충 먹거리 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 |
| ⑩ 법적기반·통합추진체계 구축 | 먹거리기본법 제정·시행, 먹거리 정책통합체계 구축 운영, 먹거리 시민참여·소통공간 마련 | |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 2020 농정 대전환 전국 순회 원탁회의 (참고6)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pp.6-7.

7)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 2020 농정 대전환 전국 순회 원탁회의 (참고6)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pp.6-7.

〈그림 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체계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 2020 농정 대전환 전국 순회 원탁회의 (참고6)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p.7.

2. 충남 먹거리보장 기본계획⁸⁾

● 주요 목적

-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 종합전략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으로 중소 가족농 판로 안정 및 먹거리 복지향상, 공공조달체계 구축 등 「먹거리 복지수도, 충남」 비전 실현, 지속가능한 먹거리체제로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

● 추진여건

- (생산)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의 지속가능성 저하
- (유통)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의 관내 유통 소비활성화 필요
- (가공) 지역 원재료 사용 가공품목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조달강화
- (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등 공공급식의 로컬푸드 확대

⇒ 지역·환경·복지·영양 등이 고려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서 정책 마련 필요

● 주요 핵심전략 : 4대 분야 27개 과제 556억 원 투자

- ① 먹거리생산 : 중소농 조직화, 기획·계약생산 강화, 지역가공 확대
 - ② 지역식품순환 : 공공·기업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 ③ 먹거리기본권 : 취약계층 로컬푸드 현물공급, 푸드사업단 운영
 - ④ 먹거리공동체 : 식생활교육 체험관 운영, 도민 먹거리플랫폼 운영
- ⇒ 전담조직 : 민관 협치 먹거리위원회 운영 및 현장 행정력 강화

● 단계별 추진계획

- (단기) 조례제정, 먹거리위원회 구성 → 먹거리순환 기본 틀 마련
- ① 도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및 민관 협치 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
- ② 지역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교육 및 다양한 도민참여 공감대 형성
- (중기) 지역 먹거리 소비확대를 위한 물류허브 및 플랫폼 구축
- ① 중소농·가족농 조직화 및 작부구축, 기획생산 확대
- ②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보강·확대 운영
- ③ 공공급식 기관별 급식비 단가 현실화(로컬푸드 현물급식 적용)
- (장기) 국가 정책과 연계 현안과제 지속추진 → 지역농식품순환체계 구축
- ① 먹거리복지 강화 및 로컬푸드 확대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8)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 2020 농정 대전환 전 국순회 원탁회의 (참고6)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p.8.

3. 시군 먹거리통합정책 현황⁹⁾

● 시군별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수립 현황(〈표 6〉 참고)

- 시군별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한 시군은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으로 나타났다. 이 중 먹거리사업을 위한 조직설립과 실제 업무를 시작한 곳은 청양군이다.

〈표 6〉 시군별 먹거리통합정책 수립 현황(2020년 3월 기준)

| 시군 | 수립여부 | 완료일 (예정일) | 추진상황(문제점) | 향후계획 |
|-----|-------|-----------------|-------------------------|---------------------------------------|
| 천안시 | 미 수립 | 2022년 예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중 | 21년 3월 용역착수 21년 12월 완료 |
| 공주시 | 수립 완료 | 2020년 7월 22일 | | 농가조직화, 기획생산, 가공촉진, 푸드통합센터 구축 |
| 보령시 | 미 수립 | 2020년11월18일 | 용역 추진 중 | |
| 아산시 | 수립 완료 | 2019년 3월 | | |
| 서산시 | 수립 완료 | 2020년 6월 17일 | | APC건립, 농가조직화, 시민모니터링단 양성 |
| 논산시 | 미 수립 | | 국비지원시 추진 (사업계획 준비 중) | |
| 계룡시 | 미 수립 | | | 계획없음 |
| 당진시 | 미 수립 | 2020년 하반기 예정 | 용역 추진 중 | 시민대상 홍보, 시민네트워크구성 푸드플랜 아카데미, 비선선포식 |
| 금산군 | 미 수립 | 2021년 4월 | 10월 용역 착수 | 2021년 4월 용역완료 푸드플랜 수립, 패키지 공모신청 |
| 부여군 | 미 수립 | 2020년 12월 | 용역 추진 중 | 용역후 기본계획 수립 |
| 서천군 | 미 수립 | | | 계획없음 |
| 청양군 | 수립 완료 | 2018년 12월 | | 먹거리위원회 구성 |
| 홍성군 | 수립 완료 | 2017년 5월 | | 푸드플랜 전담팀 구성 |
| 예산군 | 미 수립 | 2021년 1월 | 용역 추진 중 | 로컬푸드 생산자조직 구축 학교급식 출하회 농가 추가 |
| 태안군 | 미 수립 | | | 계획없음 |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푸드플랜 수립·먹거리센터 추진 점검결과(자체 조사자료).

9)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푸드플랜 수립·먹거리센터 추진 점검결과(자체 조사자료).

●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표 7〉 참고)

-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 시군은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로 나타났다.
- 추진완료한 시군은 청양군이 유일하고, 시군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을 수립하였지만 현재 미 구축한 시군은 홍성군이다.

〈표 7〉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2020년 3월 기준)

| 시군 | 구축여부 | 완료일 (예정일) | 추진상황(문제점) | 향후계획 |
|-----|-------|-------------------|---|--|
| 천안시 | 미 구축 | 2022년 | 사업구상 | 기존 급식센터 활용 |
| 공주시 | 구축 중 | 2021년 6월 구축예정 | 건립계획 수립, 입지 선정 설계발주, 공공건축심의 | 기존 급식센터 활용 민관협력 강화 |
| 보령시 | 미 구축 | | | 기존 급식센터 활용 |
| 아산시 | 구축 중 | 2022년 10월 구축예정 | 투자심사 승인, 공공건축심의 | |
| 서산시 | 구축 중 | 2021년 12월 구축예정 | 기본계획 수립완료 | 신규설치, 재단설립 |
| 논산시 | 미 구축 | | | 계획없음 |
| 계룡시 | 미 구축 | | | 계획없음 |
| 당진시 | 미 구축 | | | 2021년 기본계획 수립 |
| 금산군 | 미 구축 | | | 계획없음 |
| 부여군 | 미 구축 | | 연구용역 추진중 | 기존 급식센터 활용 |
| 서천군 | 미 구축 | | | 계획없음 |
| 청양군 | 구축 완료 | 2020년 6월 |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중 지역활성화재단 운영 | 2020년 12월 안정성분석센터 구축 2021년 6월 반가공전처리센터 구축 |
| 홍성군 | 미 구축 | 2021년 12월 | 농어촌공사 위탁, 공공건축 심의, 기본계획 승인 기존 급식센터 이전 | 건축기획, 설계, 착공 |
| 예산군 | 미 구축 | | | 기존 급식센터 기능 확대 |
| 태안군 | 미 구축 | | | 신규 설치 |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푸드플랜 수립·먹거리센터 추진 점검결과(자체 조사자료).

04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향

1. 재무적·경제적·사회적 타당성 재검토 결과 요약

● 배경 및 필요성¹⁰⁾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도 선행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 최소화하여 미래에 벌어들일 세금낭비,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충청남도가 먹거리통합정책에 있어서 ‘정말 해야 할 일’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공모 및 대상지 선정 후 정책진단을 통해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사업타당성 용역 재추진 혹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증용역 의뢰 필요성과 함께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되 먹거리라는 특수성과 공공재 성격을 감안하여 경제성보다는 공익성 측면을 감안한 추진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요약(충남 푸드플랜 연구용역 결과)

- (개요) 연구용역과제로 선정 설립타당성 검토(2019.3.) ※기관 :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목적)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실행을 위해서는 상품화, 물류 등의 사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H/W 시설건립 및 운영 필요 → 우수 먹거리 실질적 보장에 공공시설로 책임 실현
- (타당성) 향후 30년간 비용편익 분석결과 B/C 1.09로 도출 → 공공조직으로 운영할 경우에만 건립 타당성 확보 가능
- 5년 수지예산분석 결과 영업이익률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 높아 민간위탁 운영(재단설립)
- 경제적 수익성 분석결과, 공공형 조직으로 운영 시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경제 부담 해소
- 연구용역 상 광역 센터를 통한 먹거리공급 수요예측 : 1일 67만 명(전체 도민의 32%)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의 검토의견, p.2.

10)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 2020 농정 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회의 (참고6)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pp.9-10.

1) 정량 측면¹¹⁾

- 재검토 수행주체 :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지방재정투자사업 전담심사기관)
- 수요분석
 - 공공급식 160,398명, 기업체 단체급식 50,000명, 학교급식 389,175명 추정근거에 대한 분석내용 및 기초자료 등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수요가 적정한지 판단 불가함.
 - 본 사업으로 인해 기존 수요 외 추가 수요 증가분에 대한 근거자료 불충분, 경제성(B/C) 분석값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면밀한 수요조사 분석결과 보완 필요함.
- 비용
 - 2019년 2월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토지보상비 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5억 원, 매년 유지보수비 2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또는 유사사례 제시가 필요하다.
- 편익
 - 직접사업편익 중 친환경유통센터, 직거래 물류센터, 푸드인증센터, 전처리센터와 지역 가공식품센터 등 매년 성장율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편익을 과다 추정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할 때, 학교급식에서 매출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편익 산출 필요하다.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등 종합 요약

- 종합적으로 보면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일부 수치 과다추정 등의 오류가 있었다.
- 센터의 매출액 자체가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이 되지 않는 점. 매출액 증대분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고 광역 센터의 매출 증대가 시군 센터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상쇄가 필요하다.
-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비용편익 분석이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기존 기능의 대체 부분을 편익에서 제외(기존 시군 센터의 역할 감소하므로)하게 된다면 경제성 감소, '경제적 타당성 있음' 판단은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 자료 : 충남연구원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2020),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광역푸드지원센터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의견서(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0800, 2020.11.13.).

주 : 위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요약 및 정리함.

2) 정성 측면¹²⁾

● 재검토 수행주체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 ① 공공급식 수요예측에 대한 과잉 추정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성 분석 결과, 공공급식 수요예측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도의회의 문제제기,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즉, 충청남도 실무부서는 당초 충남 푸드플랜 연구용역(타당성 조사) 결과 공공급식 수요예측이 1일 67만 명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었음을 발견하였다.
- 연구용역결과 수요예측이 과다하고 각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광역 센터 이용율이 저조할 것이 우려되며 과거 실패사례를 볼 때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수요예측이 중요하고 수요예측이 잘못되면 계획자체가 잘못될 수 밖에 없다. 즉, 수요예측이 충남만 고려하여 나왔고 향후에는 인근 대도시 수요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 | |
|-------|--|--------|---------|--------|--------|-------|
| 용역 결과 | - 1일 평균 67만 명(도 인구의 31.6%) 공공급식 수요 예측은 과도한 설정으로 판단 - 67만 명은 학교급식 27만 명, 공공급식 29만 명, 로컬푸드 11만 명에서 기인 | | | | | |
| 분석 내용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 : 13개 센터, 26.3만 명 - 기타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 40만명 수요예측 전체 산정 | | | | | |
| | 계(명)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 | 263,940 | 26,532 | 120,533 | 55,045 | 59,732 | 2,099 |
| 검토 의견 | - 광역 센터 공공급식 수요예측을 도내 전체 수요로 과다 예측 - 과거 실패사례 재현 우려(천안중부물류센터, 금산국제종합유통센터) | | | | | |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자료(2020.09.03.), pp.3-4.

● ② 재단설립·운영 등 물류기능에 인건비 및 시설비 지속적 투입 무리, 적자운영 예상

| 구분 | 주요 내용 | | | | | |
|-----------|--------------------------------|--------|--------|--------|--------|--------|
| 용역 결과 |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 | | | | |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매출액(A) | 42,500 | 45,700 | 49,150 | 52,881 | 56,928 |
| | 매출원가(B) | 40,735 | 43,753 | 46,996 | 50,493 | 54,275 |
| | 매출이익(C=A-B) | 1,520 | 1,619 | 1,726 | 1,839 | 1,960 |
| | 재단운영비용(D) | 1,848 | 1,956 | 2,070 | 2,190 | 2,317 |
| 영업이익(C-D) | △328 | △337 | △344 | △351 | △357 | |

12) 자료 : 1.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자료(2020.09.03.), p.2.

2.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결과보고 : 주체별 발언 회의록(2020.09.07.), p.1&3.

주 : 위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요약 및 정리함.

| 구분 | 주요 내용 |
|-------|---|
| 분석 내용 | - 공공급식 수요 추정치(67만 명)에 따른 매출액 과다 산정 |
| 검토 의견 | - 태생적 적자운영 구조 예상(재단법인 운영비 연평균 20~30억 원, 인력운영 20명) - 매출이익 감소로 영업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 예상 - 이에 재단법인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운영 구조 예상 |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자료(2020.09.03.), pp.3-4.

● ③ 기존 유사사업 운영 실패사례로부터의 교훈¹³⁾

- 천안중부물류센터의 경우, 사업비 287억 원, 1999년 개장이후 485억 원 적자발생으로 파산하고 도유 재산화, 급변하는 농산유통시장 대응 부족(대형마트 등장 등) 및 관리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다.
-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경우, 사업비 267억 원, 2006년 개장이후 일반기업에 위탁 운영 중으로 현재 대형유통센터 운영능력 미숙 및 산업관계자 간 이해충돌, 대형시설 운영자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 천안중부물류센터,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등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거 실패사례 재현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실패요인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④ 시군 및 생산자 입장에서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용 시 물류비 추가 소요, 실제 농가소득 향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적을 것으로 판단

| 구분 | 주요 내용 |
|---------|---|
| 현황 및 문제 | - 수수료, 운송비 등 납품가격 인상요인 발생(광역 센터 및 시군 센터 운영수수료 8%~33%) - 도 단위(광역) 8%, 중간공급소(시·군) 25% |
| 분석 내용 | - (유통비용) 물류 경유지 증가로 인한 유통수수료 가중 - 광역 센터 경유 시 수수료 중 수집·운반비 등 8% 이상 추가 발생 예상 - 학교급식 광역친환경현물지원센터 지원사업 일몰 등 여건변경(2020년부터) |
| | <pre> graph LR A[생산자] -- 1,000원 --> B[광역센터] B -- 8% --> C[중간조직] C -- 25% --> D[급식센터] D -- 8% --> E[학교] </pre> |
| 검토 의견 |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중간공급소 등 물류경유지 증가로 유통수수료 가중 - 광역친환경현물센터 운영수수료(광역 8%, 중간공급소 25%)에 대하여 시·군 반대 및 업체와의 이견으로 사업추진 중단(2020년 2월) |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자료(2020.09.03.), pp.3-4.

13) 자료 : 1.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자료(2020.09.03.), p.2.
2.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결과보고 : 주체별 발언 회의록(2020.09.07.), pp.1-3.

● ⑤ 시군에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의무적 이용 강제할 수단 부재¹⁴⁾

| 구분 | 주요 내용 |
|---------|---|
| 현황 및 문제 | - 지역 내 기존 먹거리 공급자(업체)와 발주자(영양사) 존재로 수요처 확보 어려움 - 높아지는 수수료 문제로 이용 활성화 저해 |
| 분석 내용 |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시군(센터)에 의무 이용할 강제 수단 근거, 발주 요구 권한 없음 - 지역농산물외 타 시군 농산물 수요가 일부품목에 제한 |
| 검토 의견 | - 수요 강제 수단 없어 성공추진 담보 불가 |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자료(2020.09.03.), pp.3-4.

● ⑥ 국가 및 지역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정책추진 분위기 미성숙, 시기상조로 판단

- 먹거리통합정책 법률 및 제도화 미비, 추진주체의 불확실성(농식품부 유통분야), 타사·도 참여 부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은 국가 및 지역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정책추진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한다.
- 먹거리 공공지원 법률 발의에 관계부처 반대 및 검토 필요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고 9개 부처 및 34개 법률과 연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 ⑦ 먹거리 정의(정책목표)와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정책수단)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불일치

-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참여주체 중 하나인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들로부터 사전 동의없이 임의 수요에 입각한 대규모 재원투입 시설 구상은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⑧ 사업비 중 국비매칭 사업비 전무하여 도 재정에 부담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지원없이 도비 185억 원을 전체 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은 무리한 여건이고 도 재정에 큰 부담이자 적자운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 재정투자심사 시 국비지원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하였으나 현재 관련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대체할 국비 확보 가능한 대체사업 발굴 추진이 필요하다.

● ⑨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¹⁵⁾

- 현재까지 전국에 통합물류와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례는 없고 실제 광역물류기능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4)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자료(2020.09.03.), pp.3-4.

15)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결과보고 : 주체별 발언 회의록(2020.09.07.), p.2.

-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광역 통합물류와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센터 준비가 늦는 이유는 광역에서 실질적인 사업기능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 충청남도 내부적으로 도출한 결론

- 과거사업의 실패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었다. 즉,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행정의 책임경영 부족, 경영미숙에 따른 재정낭비 등 실무추진 역량 측면에서 행정은 한계가 있다.
- 이런 사례로부터 철저한 사전타당성 검증 노력, 사업성 분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번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도 연구용역 결과 수요예측 과다 등 문제를 외면한 채 강행할 수 없는 실정에 도달했다.

※ 참고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찬성론¹⁶⁾

- (낮은 충남산 비중) 충청남도는 전체 농축수산물 중 10%만을 도내에 유통하고 있다.
- (높은 타 지역산 비중) 충남 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되는 농산물 중 타 지역 농산물이 50%-60%를 차지하므로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농 중심의 작부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점을 들고 있다.
- (15개 시군의 낮은 공급율) 15개 시군의 공공급식센터는 공급을 35%밖에 못하고 있어 먹거리센터가 15개 시군 센터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 공급하지 못하는 나머지 65%를 공급할 수 있다.
- (품목 다양성 문제, 수급가능한 품목 불균형) 공공급식소에서는 충남의 농축수산물이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일정기간 공급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 수급에 있어서 극도의 불균형 문제를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
- (저가입찰제) 학교급식, 공공급식 식재료 저가입찰제를 적용받아 저가의 품질 낮은 식재료를 공급받는 구조적 문제로 학교급식 부실식단 등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 (실패사례와 차이점) 경제성이 우선이었던 타 사례(천안중부물류센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와 달리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사업목적이나 추진체계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고 과거 실패사례와 현재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사업목적과 취지가 다름을 감안해야 한다.
- (광역의 기능과 역할) 충청남도에서 통합물류·유통 중심 기능만이 아닌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서 시군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광역 기능에 맞는 시설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16) 자료 : 1.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 부여군수 접견결과(2020.10.21.), p.2.
 2. 대전일보사]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44962(검색일자 : 2020.10.21.)
 3.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결과보고 : 주체별 발언 회의록(2020.09.07.), p.2.
 4. 김기서(2020), 건강하고 효율적인 충청남도 무상급식 운영·관리에 대한 제언, 충청남도의회 제11대 제321회(정례회) 제1차 5분발언 회의록(2020.06.10.).

- (전국 모델화)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서울, 경기도 등 대도시와 공공급식 영역까지 농산물 공급이 가능해 전국 최초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모범사례가 된다는 점, 사업을 발전시켜 대도시에 유통하고 타 지역과 MOU 체결 등 노력하면 수요는 문제되지 않는다.
- (시군의 반응) 각 시군에서도 광역 통합물류 및 유통기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광역은 시군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시군으로부터 수집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중소농들이 작부를 조직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전이나 세종, 서울 같은 곳에서도 광역 센터 물류기능 시설이 있으면 얼마든지 공급받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 전북 완주 및 전주의 성공사례(자체 수요가 없는데도 외부 매출실적 많음)를 보면, 광역 센터 성공가능성 있어 보이고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수요문제는 해결 가능하고 물류비에 있어서 오히려 절감효과 기대할 수 있다.

2. 이용수요 설문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명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용수요 및 필요성 설문조사
- 조사주체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직거래활력팀
- 조사기간 : 2020년 9월~10월
- 조사대상 : 15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담당자(행정)
- 조사내용 :
 - ① 충남 공공급식 수요기관 및 급식인원 실제 이용수요
 - ②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조회
- 조사방법 : 공문요청, 서면자료 이메일 회신 등

● 조사결과1 : 충남 공공급식 수요기관 및 급식지원 실제 이용수요(〈표 8〉 참고)

- 충남의 전체 급식인원은 약 88,544명으로 추정하고 이 중 학교급식을 제외한 공공급식 수요는 27,385명으로 추정, 공급율은 약 30.9%를 보인다.

〈표 8〉 충남 공공급식 수요기관 및 급식인원 실제 이용수요(2020년 기준)

| 시군 | 전체 급식인원(a) | 공공급식 수요인원(b) | 공급율(b/a*100) |
|-----|------------|--------------|--------------|
| 총계 | 88,544 | 27,385 | 30.9% |
| 공주시 | 11,606 | 10,886 | 93.8% |
| 태안군 | 319 | 250 | 78.4% |
| 홍성군 | 8,445 | 6,565 | 77.7% |
| 보령시 | 1,414 | 800 | 56.6% |
| 서천시 | 2,562 | 1,110 | 43.3% |
| 금산군 | 1,041 | 368 | 35.4% |
| 논산시 | 2,257 | 760 | 33.7% |
| 계룡시 | 602 | 200 | 33.2% |
| 청양군 | 1,720 | 570 | 33.1% |
| 당진시 | 4,463 | 1,167 | 26.1% |
| 천안시 | 29,069 | 3,563 | 12.3% |
| 예산군 | 1,615 | 196 | 12.1% |
| 아산시 | 19,346 | 930 | 4.8% |
| 서산시 | 2,373 | 20 | 0.8% |
| 부여군 | 1,712 | (미응답) | 0.0% |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공공급식 수요기관 및 급식인원 조사 결과(총괄, 2020년 9월~10월 조사).

주 : 1. 전체 급식인원은 공공급식 실시 기관의 전체 급식 대상인원을 말함.

2. 공공급식 수요인원은 향후 광역 센터를 이용하여 식재료를 공급받는 실제 수요예측인원을 말함.

● 조사결과2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의견

①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 9〉 참고)

- 필요하다는 의견이 10개 시군, 조건부 필요(상호보완적)하다는 의견이 2개 시군,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개 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순서에 대한 의견(〈표 10〉 참고)

- 시군 센터에서 광역 센터 추진순서로 응답한 의견은 8개 시군, 광역 센터에서 시군 센터 추진순서로 응답한 의견은 3개 시군, 시군 센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1개 시군, 광역과 시군 센터가 동시에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1개 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기존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용 여부(〈표 11〉 참고)

- 일부 품목 등 이용의향 있다고 응답한 의견이 7개 시군, 전 품목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의견이 4개 시군, 이용의향 없다고 응답한 의견이 1개 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기타 의견¹⁷⁾

- 공공급식 과부족에 대한 컨트롤 기능만 필요하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간 충돌 예상,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만으로도 충분하다.
- 시군 간 우수 식재료 교류, 관내농산물 소비활성화, 물류체계구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 필요하다.
- 지역농산물 다양하지 않아서 식재료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다.
- 지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 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 광역이 중심이 되어서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 즉, 지역 내 농산물 과부족분 유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대도시권(수도권 및 대전 시장) 공급기반 확보하여 대응 필요하다.
- 지역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잉여 농산물 판로개척이 필요하다.
- 식재료 품질보장, 적정가격 공급, 지역산 외 품질 신뢰감과 단가 안정 필요하다.
- 물류중심 기능 센터의 실패요인은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낮은 품질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기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용을 위해 급식수요의 일정비율이상 광역에서 공급받도록 해야 한다.
- 시군 모든 농산물에 대한 통합기능은 불가할 것이고 시군별 부족 또는 잉여농산물에 대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7)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결과보고 : 주체별 발언 회의록 (2020.09.07.), p.2.

〈표 9〉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한 의견

| 구분 | 내용 | 응답시군(개) |
|-----|---------------|---------|
| 1 | 필요 | 10 |
| 2 | 조건부 필요(상호보완적) | 2 |
| 3 | 불필요 | 1 |
| 총합계 | | 13 |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의견조회 결과(총괄, 2020년 9월~10월 조사).

〈표 10〉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순서에 대한 의견

| 구분 | 내용 | 응답시군(개) |
|-----|---------------|---------|
| 1 | 시군 센터 → 광역 센터 | 8 |
| 2 | 광역 센터 → 시군 센터 | 3 |
| 3 | 시군 센터로 충분 | 1 |
| 4 | 광역+시군 동시 설립 | 1 |
| 총합계 | | 13 |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의견조회 결과(총괄, 2020년 9월~10월 조사).

〈표 11〉 기존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용 여부

| 구분 | 내용 | 응답시군(개) |
|-----|------------------|---------|
| 1 | (일부품목 등) 이용의향 있음 | 7 |
| 2 | 전 품목 이용 | 4 |
| 3 | 이용의향 없음 | 1 |
| 4 | 현재 센터 없음 | 1 |
| 총합계 | | 13 |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의견조회 결과(총괄, 2020년 9월~10월 조사).

3. 기능과 역할, 방향 재정립¹⁸⁾

1)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의 원칙·방향·성격

● 기본원칙과 방향

- (정책정의)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이란, ‘충남이 광역 최상위 민관 협치행위를 통해서 먹거리와 관련한 15개 시군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먹거리보장 기본계획)을 통합 조정·조율하는 정책’을 말한다. 즉, 충남 지역 내부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교육-환경(재활용 등)’을 서로 순환시킬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하게 연계·작용할 수 있도록, 상호 네트워킹을 촉진하도록 만들어어나가는 추진체계 전반을 통칭한다.
- (원칙·방향)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원칙과 방향은 15개 시군 먹거리통합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민관 협치행위를 기본으로 하고 최상위로 설정한다.
- (추진근거)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은 현 시대가 추구하는 정책과 맞지만 이상적이고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민관 협치 및 융복합 정책을 추진할 주체 설정이 중요하게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민선 7기 충청남도도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의 컨트롤 타워(소프트웨어)로서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논의기구)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는 최상위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격상시켜서 먹거리 통합 운영체계를 만들어어나가도록 하고 통합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한다. 먹거리와 관련한 의제를 공동으로 발굴, 기획, 자문, 통합조정과 보완, 조율, 심의 및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민주성·공공성·공익성 등에 입각한 운영을 해야 한다.
- (참여주체)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과 관련한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공공 기능단체 등 민간단체 연합체가 자발적으로 설립되고 민주적인 논의 구조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의제별 하나씩 먹거리 관련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 (핵심기능)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은 시군 먹거리통합정책을 조정, 보완하는 역할로서 지역별 생산-소비 시스템을 안정화하도록 네트워킹 기능이 중요하다. 시군 힘을 강화하고 이렇게 강화된 힘들이 광역으로 모아지는 선순환을 그려내도록 한다.
- (논의순서)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은 시군 먹거리통합정책이 일정 수준 안정화 궤도에 올랐을 때 광역 먹거리통합정책도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같은 하드웨어(물류유통 관련 시설 등) 이슈는 시군의 진행 정도에 따라 차후 통합, 조정, 보완 관점에서 논의한 뒤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즉, 단계적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 민관 거버넌스 기구의 위상 복원, 사업초기 2~3년 간 소프트웨어

18) 자료 : 1. 충남연구원(2020), 논의과제별 서면자문의견서,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문가&행정과의 간담회 발표자료(2020.11.19.)*김오열 대표, 김호 교수, 정상진 대표, 정환열 상임이사, 송요권 팀장, 안현승 주무관

2.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결과보고 : 주체별 발언 회의록(2020.09.07.).

주 : TF회의결과, 전문가 간담회 자문 및 서면자문의견서 결과 등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정리 및 요약함.

어에 집중(시군별 역량강화, 실태조사 등)하고 향후 통합물류와 유통 등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한다.

- (역할분담)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은 충청남도가 수립하고 이행하되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율, 조정, 정보의 공유, 논의,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다. 시군은 먹거리통합정책과 관련한 실무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기획생산 및 작부체계 구축, 품질관리, 가격조절, 교육 및 체험 계획, 안전성 관리 방향 등 광역 기능과 역할이 많이 있는데 물류기능 중심의 센터 운영에 국한해서 논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¹⁹⁾

● 성격

- (공공성)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과 함께 맞물려서 민관 협치를 통한 충남의 먹거리 공공성 확보가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이해당사자(농민, 학부모, 학생, 임산부, 영양교사, 먹거리 취약계층 등)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우, 타당성 재검토 결과 충청남도가 인건비 및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적자보전 발생 가능성 높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결국엔 공공성 확보가 불가능함. 하지만 먹거리 관련 사업은 공공재로 봐야 하기에 사회적 비용을 따지기 보다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야 하고 공공성을 중시해야 함.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임.
 -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적자보전을 면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자가 점차 감소하게 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결국엔 공공성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
 -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일함(균형지점)을 강조하거나 공공성과 수익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가장 최적 모델이지만 현실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는 힘든 상황이고 어떤 지점이 적정한지는 충청남도 정책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짐.
- (연계성) 먹거리 체계는 농식품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연계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의 교육·건강·영양·복지·환경 등과도 연계되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해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다. 먹거리 재난 위기는 공공적 먹거리체계에 기반한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한 정부-지역사회-시민의 집단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 (다층성) 농식품 전 과정의 관계자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 대상의 다층성은 정책 추진의 다면적·종합적인 거버넌스 접근이 요구된다.
- (지역농업 지속가능성)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므로 보편적 먹거리 보장체계 강화하여 먹거리를 통한 지역순환경제체계 확립, 지역농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염두에 뒀다 할 것이다.

19)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결과보고 : 주체별 발언 회의록 (2020.09.07.).

※ 참고 : 민관 협치 예시①(충청남도 학교급식정책 추진 관계기관별 기능과 역할)

- 충청남도 학교급식정책의 추진 관계기관인 충청남도 및 광역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교육청(교육지원청),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 생산자(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표 12〉 참고).

〈표 12〉 충청남도 학교급식정책 추진 관계기관별 주요 기능과 역할

| 구분 | 주요 내용 |
|--------------------|--|
| 충청남도 및 광역급식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정산 · 학교급식 추진 상황 지도·감독 및 성과분석 ·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 식생활교육 추진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침 마련 및 점검 · 광역 농산물 조달체계 구축 및 시군 간 수급조정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추진 및 작부체계 구축 지원 · 가공·공산품 안전성 기준 마련 · 학교급식업무 협의·조정 등 관련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
| 운영위원회 (광역 및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과 소비처인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 · 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위하여 식재료 납품업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외 권한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센터 운영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정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수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 배송,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 분과위원회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분과위원회) 공급 적격업체 선정, 운영수수료, 위생안전관리,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각종 정책 심의 · (물품가격분과위원회) 식재료 물품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조달 물품 선정하고 공급업체 제안가격과 시장가격 등을 비교하여 품목별 적정가격 심의 · (생산자분과위원회) 계약생산을 위한 작부체계 구축 등 생산관리 심의 · (교육홍보분과위원회) 식생활교육과 건강 레시피 개발 등 심의 |
| 교육청 (교육지원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 · 친환경농축산물 현물·수계약, 충남산 친환경농축산물 50%이상 사용 권장, 식생활교육 등 반영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협조, 학교이용 권장 |
| 시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에 근거한 현물공급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모, 지정 · 컨트롤타워 기능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식재료 공급·배송업체 공모·선정 · (보조금 센터 지원 시)보조금 지급 및 정산 보고 · 학교급식지원센터(현물공급형 포함) 지도·감독 |
| 학교급식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공급품목·공급량·단가·수수료 결정 및 학교제공 · 식재료 물품 관내외 수급체계 구축 · 계약재배·작부체계·수발주·배송 관리 · 학교 및 공급·배송업체간 계약 ·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품질 관리 · 납품확인서 징구 및 정산, 보조금 청구 |
| 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단에 따른 식재료 센터로 발주 및 납품확인서 발급 · (보조금 학교 현금지원 시) 보조금 정산 · 친환경농축산물 이해도 증진 등 식생활교육 강화 |
| 생산자(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친환경농산물 등) · 생산단계의 안전성관리 강화 · 출하 시 시험성적서 및 검사필증 발급 |

자료 : 1. 충청남도(2018), 3농혁신 백서 2011~2018 제2편, p.871.
 2. 충청남도(2017), 2017 충청남도 민관 협치 우수사례집, pp.110-111.
 3. 강마야.이도경(2020), 충남 농정 거버넌스 체계 실태 사례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p.108.

※ 참고 : 민관 협치 예시②(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관 협치 운영원칙)

- 민관 협치를 통한 급식센터 운영원칙으로는 시장존중원칙, 민주성 원칙, 구매자 선택권 원칙, 통합적 식생활교육 원칙, 정보공개 원칙, 지역순환경제 원칙, 유통 및 물류의 민간주도 민·관 협업체계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표 13〉 참고).

〈표 13〉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관 협치 운영원칙

| 구분 | 주요 내용 |
|---------------------------|--|
| 시장존중원칙 | · 기존 학교급식시장 대체하는 것이 아닌 식재료 시장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관행 개선, 혁신 · 강화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물품들이 투명하게 거래되는 대안적 시장 창출 |
| 민주성 원칙 | · 지자체가 조례제정 법적근거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센터 설립 · 지역 내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치기구를 통해 합의를 바탕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민주적인 집행과정을 거침. |
| 구매자 선택권 원칙 | · 구매자(영양교사)의 자율적 식단편성과 물품선택권 보장 |
| 통합적 식생활교육 원칙 | · 센터가 급식과 식생활교육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 역할 수행 |
| 정보공개 원칙 | · 식재료 품질기준 및 물품목록 및 가격 등 식재료 관련 모든 사항 및 통계를 공개해 절차의 투명성 보장 |
| 지역순환경제 원칙 | · 식재료 생산, 가공, 유통의 지역 내 주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역순환 경제 달성하여 지역경제, 지역농업,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식생활 체험교육 및 홍보기능 |
| 유통 및 물류의 민간주도 민·관 협업체계 원칙 | · 물류 집하장 등 물류센터 운영, 안전관리 · 식재료 공급업체 및 지역농산물 관리 · 식재료 검수·검품 및 배송차량 관리 · 수발주 프로그램 운영 및 정산 |

자료 : 1. 충청남도(2017), 2017 충청남도 민관 협치 우수사례집, pp.112-113.
2. 강마야·이도경(2020), 충남 농정 거버넌스 체계 실태 사례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p.110.

2)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 개요

-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정책 위상을 결정한 뒤 그에 맞는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충청남도 먹거리 공공급식 지원조례’ 및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먹거리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물적 기반인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도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
-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H/W(통합물류 및 유통)와 S/W(민관 협치 등)가 일치화(Synchronized), 광역 먹거리 통합관리 플랫폼, 광역먹거리통합정책의 컨트롤타워 실무기반이 된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융합되어 거의 동시에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순으로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하지만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하드웨어 시설 설치를 우선으로 하는 먹거리통합정책 추진은 취지의 변질과 사업 부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1단계는 컨트롤타워(C/T) 역할을 수행하고 2단계는 하드웨어 시설 도입이 순서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 소프트웨어로서의 기능과 역할

-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소프트웨어 측면은 컨트롤타워로서 민관 거버넌스 기구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제1의 우선순위로 제안한다.
-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관 협치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 관리 및 운영
 - 시군 간 기획생산 촉진 및 통합 작부체계 구축 지원(예. 지역단위 공동체의 다양성·순환성·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시군별 중소 가족농 생산자 통합출하회 육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조정, 지역 산 비중 확대 노력)
 - 충남 내 지역 간 수급조절 및 가격조절
 - 학교 및 공공급식 관련 정보시스템 고도화
 - 시군 간 정보공유와 네트워킹
 - 다양한 정책지원과 더불어 중복사업 사전 조율(예. 학교급식, 임산부 꾸러미 외에도 이유식 꾸러미, 어린이 꾸러미, 실버 꾸러미 등의 정책 확장에 대비하는 시스템 등)
 - 산지 지역과 소비지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시장 확대, 도시 관계시장(공공급식) 창출
 - 도시형과 농촌형에 적합한 생애주기별 먹거리 시민교육 체계 구축
 - 먹거리 복지체계 강화 및 대상자 맞춤형 먹거리 인권 강화(예. 독거노인·장애인 등)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안정화 이후) 지역순환가공 강화 및 지역 가공산업 활성화

를 위한 원료 생산단지 구축(하드웨어 측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 간 균형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기에 물류망, 기획가공 확산), 폐기물 저감 및 부산물 활용 방안, 로컬푸드 유통채널 다양화 발굴 지원, 일정 수준의 농산물 품질관리 노력 등

● 하드웨어로서의 기능과 역할

-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하드웨어 측면은 15개 시군 내 기초지자체 연계를 통한 물류체계 확립, 지역 내 유통 흐름 관리, 먹거리 안전성 시험·분석·관리, 교육 체험·회의 등 소통 공간(자원순환의 유기농업과 생물 다양성 교육을 위한 체험형 시민 교육센터, 생애주기별 먹거리 시민교육센터 운영), 참여자 인증체계 구축 지원, 소비와 홍보 공간 등 기능과 역할을 제안한다.
- 하드웨어 안정적 운영과 소프트웨어 진화를 위한 하드웨어 설립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안) 순수 도비로 지원을 통해서 연도별 건립방안(물류유통시설 규모 축소 등)
 - (2안) 국비와 도비 매칭을 통해서 연도별 건립방안
 - (3안) 국비·도비·시군비 매칭을 통해서 건립하는 방안
- ☞ (1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충청남도 추진의지가 크지 않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현재 상황으로 (3안)을 유력하게 생각할 수 있다.

● 몇 가지 전제조건

① 운영주체 문제

- 주체가 모호하거나 부재한 상황에서 통합물류와 유통을 담당하는 물류기반은 지속가능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매년 발생하는 운영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 통합물류와 유통을 담당하는 하드웨어 운영주체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정책이자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므로 충청남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 만약 특정시군(부여군)이 H/W 소유주체이자 운영주체로 한정된다면, 시군별 특색이 있고 개성이 강한 생산자, 생산조직의 작기, 작부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명분이 약하게 됨. 15개 시군에게 골고루 집중하지 않고는 특정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머무를 개연성이 큼. 타 시군 연계와의 한계점이 존재함. 예를 들면, 특정시군 농산물의 우선 취급 기조에 타 시군의 소외감으로 광역기능의 집중이 불가하게 되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타 시군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하드웨어 재설계 문제

- 충청남도가 운영주체가 되어서 광역먹거리통합정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에 맞는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정립, 하드웨어 재설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이다. 민관이 협치해서 설계 단계부터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3) 충남 광역과 시군 간 센터의 기능과 역할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 충청남도는 시군 간 네트워크·통합·조정 등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시군 농산물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15개 시군 전체를 포괄해야 하므로 광역과 시군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입지 선정지역인 부여군과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이다.²⁰⁾
- 기본적으로 시군별 먹거리통합정책 추진과 성과인 ‘시군 먹거리위원회 내 민간단체의 대표성과 운영 수준 및 경험, 시군민의 관심과 인식 및 합의’를 광역으로 연결, 확장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 현재 충청남도는 대부분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일부 시군(공주, 서산, 아산, 청양)의 경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완료이거나 계획 중이다.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면 광역·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H/W) 간 물류·유통 부문에 상호 보완·협력방안 혹은 충돌 해소방안을 논의해야 하고 이에 맞는 역할분담을 정해야 한다.

●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표 14〉 참고)

- 광역과 달리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촘촘한 실무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전체 업무를 살펴보면, 크게 생산관리를 기본 업무로 하고 그 외에도 정보 및 물류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기본 업무로는 지역 내 농산물 계획생산-계획소비 시스템 구축, 품목별 출하회 관리 및 육성이다. 시군은 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내 생산 및 소비체계 확립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민관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달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달성된 이후 물류기능 보완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② 정보 부문은 식재료 품목 관리(상품목록 서비스), 식재료 수발주 및 정산, 식생활(학생, 학부모, 먹거리 취약계층 등) 교육 및 홍보 지원, 각종 학교급식지원 거버넌스 기구 운영, 행정 정책지원 등이다.
 - ③ 물류 부문은 식재료 물류 관리, 식재료 배송 관리, 창고 관리 등이다. 시군별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각자 마련하는 것이다.

〈표 14〉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체 업무(예시)

| 구분 | 주요 업무 | 핵심 내용 | 비고(비용발생 여부) |
|----|-------|-------|-------------|
|----|-------|-------|-------------|

20)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결과보고 : 주체별 발언 회의록 (2020.09.07.)

| 구분 | 주요 업무 | 핵심 내용 | 비고(비용발생 여부) |
|----|-------------------------------|---|--|
| 기본 | 농산물 계획 생산-소비 시스템 | · 연중 출하를 위한 지역 품목별 작부체계 구축 · 연중 소비를 위한 소비처 품목별 수요량 파악 · 잉여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조달체계 노력 · 지역 내 공공급식 소비처 발굴, 수요 파악 | 행정인력 투입 (인건비 산정 제외) |
| | 품목별 출하회 관리 및 육성 | · 품목별 출하회 조직관리, 조직화 유도 노력 · 품목별 품질 관리 및 교육 활동 | |
| 정보 | 식재료 품목 관리 (상품목록 서비스) | · 식재료 품목선정 관리 및 품목간소화 · 식재료 가격결정 및 수수료 관리 · 식재료 수급, 공급적격업체 선정 및 관리 | 행정인력 투입 (인건비 산정 제외) |
| | 식재료 수발주 및 정산 | · 식재료 주문 및 발주 프로그램 사용(전산) · 급발주 및 주문변경 처리 · 클레임 대응 · 학교급식지원사업 정산 및 회계 처리 | 계약직 공무원 채용 (인건비 산정 반영) |
| | 식생활 교육 및 홍보 지원 | · 식생활 교육 협조 및 지원, 계획수립 · 먹거리 홍보 협조 및 지원, 계획수립 ·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운영 (주관주체 : 교육지원청 및 학교 영양교사) (지원주체 : 학교급식지원센터) | 행정인력 투입 (인건비 산정 제외) |
| | 각종 학교급식지원 거버넌스 기구 운영 |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학교급식지원 운영위원회 운영 · 학교급식지원 분과위원회 운영 · 각종 행정보고 및 정보 생산 | 행정인력 투입 (인건비 산정 제외) |
| | 행정 정책지원 |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 간 계약 및 정산 · 농산물 작부구축 지원 및 농가조직 관리 | 행정인력 투입 (인건비 산정 제외) |
| 물류 | 식재료 물류 관리 | · 검수 : 유통기한 준수 확인 등 · 검품 : 품질기준 준수 확인 등 · 피킹 : 배송처별 주문내역 일치 확인 등 · 사료채취, 식품원산지 확인 및 안전성 검사 · 검사결과 관련 문서 수발 업무 | 민간 위탁(용역) 운영비 발생 (행정의 관리, 감독, 업무지시 하) |
| | 식재료 배송 관리 | · 배송업체 및 배송차량 관리 · 배송기사 관리 · 배송노선 조정 | 민간 위탁(용역) 운영비 발생 (행정의 관리, 감독, 업무지시 하) |
| | 창고 관리 | · 창고 내외부 전체 위생관리 · 온도관리(냉장실, 냉동실, 배송차량) · 각종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독과 청소 · 보안 및 시설 안전 관리 | 민간 위탁(용역) 운영비 발생 (행정의 관리, 감독, 업무지시 하) |

자료 : 강마야, 김기홍, 서환석(2017),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 운영계획 등 연구용역,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pp.79-80.

● 충남 광역과 시군 간 역할 분담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경쟁구도에 놓이면서 상호 간 운영권 침해, 지역 농민들의 출하권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 우려,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취지와 정체성은 축소되거나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역과 시군 간 충돌 방지를 위해서 광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① 민관 거버넌스에 기초한 사업실행이 필요하다. 기초지자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생산자-소비자 간 연대 협력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고 기초지자체간 연대를 위해서 생산자 그룹, 소비자그룹, 행정, 중간지원조직 등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논의하도록 유도, 운영, 관리, 조직한다.
- ②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 식재료 공급체계를 확립한다. 기초지자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역 산 공급비중 확대를 위한 생산자 교육, 지원, 지자체간 연계 등이 필요하다.
- ③ 품목별 또는 유형별 시군과 광역 사업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시군에서 부족하거나 잉여되는 농식품의 네트워킹 및 수요에 맞는 작기 작부 배정,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강사풀 준비와 교구교재 개발, 통합 생산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효율적인 광역 농식품 물류체계 구축, 광역친환경 및 일반농산물 생산공급 일원화(광역 생산자단체 공동시설 이용), 충남 이외 조달 농산물에 대한 공동구매로 단가 인하 및 거래효율성 증대 노력, 시군에서 광역 간 물류는 시군 내 친환경농가와 일반농가 간 협력으로 효율을 높여야 할 부분도 있다.
- ④ 시민계층별 먹거리 보장체계 강화이다. 일반시민에게는 직매장 등을, 다음 세대이자 학교급식 대상자 및 취약계층에게는 공공급식을, 지역 외에는 직매장,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을 연계하도록 한다. 생산지 지자체와 소비지 지자체간의 연대 협력을 유도하여 계층별 먹거리를 보장한다.

4) 충남 광역과 시군 간 물류기능 역할 분담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물류기능 수행방식 장단점(〈표 15〉 참고)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물류기능과 역할 업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물류 직영일 경우와 물류 위탁일 경우로 구분하여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경영효율성, 재정 측면, 운영 측면, 업무 전문성, 업무 지속성, 책임 소재, 고용 유연성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물류기능은 매우 실무적이고 숙련도를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직영보다 위탁(외부용역)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경쟁구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시군과 광역 간 충돌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여 물류 효율성 개선 효과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상호보완 기능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수도권 등 충남 외부로 나가는 경로 모색도 불가피할 것이다. 즉, 물류 효율성은 적재물의 특성(농수산물이나 공산품이나, 소분 및 포장 비중이 높은지, 소비자와 산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수집과 분산의 물류차량 적재량, 산지와 소비지간 거리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15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기존 시군별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역할로서만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표 15〉 물류 직영과 물류 위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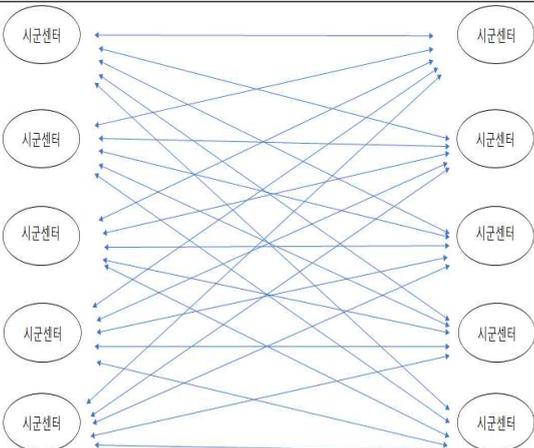
| 구분 | 물류 직영 | 물류 위탁(용역) |
|--------|---|--|
| 경영 효율성 | · 호봉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상승 | · 인건비 및 수당 등 비용부담 덜함 |
| 재정 측면 | ·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부담 증가 ·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 예산 절감 |
| 운영 측면 | · 책임운영 가능, 공익성 담보 가능 · 당초 공익형 사업목적 및 취지에 부합 · 업무부담 가중 우려 · 물류전반 관리감독만 운영함이 바람직 | · 책임운영 측면에서 소홀할 가능성 · 공익 사업이 영리 사업으로 자칫 변질 · 전문 물류업무 영역과 관리감독 영역 분리도 원활한 운영 가능 |
| 업무 전문성 | · 관련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직군 부족 | · 관련 업무 경험과 숙련도 충분 |
| 업무 지속성 | · 인사이동 및 승진에 따른 지속성 결여 | · 업무 지속성 확보 |
| 책임 소재 | · 식중독 사고 등 문제 발생 시 감사 · 행정처분으로 업무 중지 · 학교급식지원 차질 발생 | · 문제 발생 시 사업체 변경 가능 · 학교급식지원업무 계속 수행 |
| 고용 유연성 | · 공무원이므로 고용 유연성 부족 | · 민간이므로 고용 유연성 확보 |

자료 : 강마야, 김기홍, 서환석(2017),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 운영계획 등 연구용역,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p.106.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간 물류기능 수행방식 장단점 비교(〈그림 4〉 참고)

- 물류유통의 중심 역할(소분, 배송 등)은 시군이 되어야 하고 광역은 광역산 농식품을 필요로 하는 시군에 공급하는 역할로 한정하고 전국산 경우에도 필요로 하는 시군에만 공급해야 한다. 광역은 각 시군 간 원물 가격의 차이로 인한 지역산 농산물 공급 비중 저하가 우려될 때에는 물류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맡아야 한다. 도 단위 통합물류 기능은 자칫 지자체의 역량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기초지자체의 기획생산 체계 구축 역량, 가격, 물류 및 배송비 처리의 문제 등을 선결해야 할 것이다.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전제로 한다면, 물류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면 다음과 같이 광역 단위 및 시군 물류체계 장단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시군 센터 간 물류체계를 이용할 시, 1시군 센터에서 공급 가능한 품목 한계로 13시군 센터와 직접 거래 해야 하고 1시군 센터에서 타 시군 센터 과부족 품목을 알 수 없어 직접 거래 한계에 노출, 1시군 센터 수요품목 및 주문량 충족 한계, 개별 시군 센터가 농산물의 과잉분과 부족분 정보를 파악하는데 따른 시간 소요, 거래를 조정하는데 따른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다.
- 광역 센터 물류체계를 이용할 시, 시군·광역 작부구축 및 출하회 육성으로 시군 센터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시군 센터의 과부족 품목의 수집·분산 유통으로 시군 센터 수요 충족 가능, 수발주 시스템으로 광역 조정 가능, 지역 내 또 다른 중앙집중형 물류시설이 되면서 집하와 소분에 따른 비용 부담, 물류비 추가 부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림 4〉 광역 및 시군 간 물류체계 특징

| 구분 | 시군 센터 간 물류체계 | 광역 센터 물류체계 |
|----|---|--|
| 유형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군 센터에서 공급 가능한 품목 한계로 13시군 센터와 직접 거래 해야 함 · 1시군 센터에서 타 시군 센터 과부족 품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광역 작부구축 및 출하회 육성으로 시군 센터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시군 센터의 과부족 품목의 수집·분산 유통 |

| 구분 | 시군 센터 간 물류체계 | 광역 센터 물류체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 알 수 없어 직접 거래 한계 노출 · 1시군 센터 수요품목 및 주문량 충족 한계 · 개별 시군 센터가 농산물의 과잉분과 부족 분 정보를 파악하는데 따른 시간 소요 · 거래를 조정하는데 따른 시간 소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 시군 센터 수요 충족 가능 · 수발주 시스템으로 광역 조정 가능 · 지역 내 또다른 중앙집중형 물류시설이 되면서 집하와 소분에 따른 비용 부담, 물류비 추가 부담 불가피 |

자료 : 김오열(2020), 서면자문 의견서.

※ 참고 : 친환경 농산물 및 일반관행 농산물의 조직화 현황

- 시군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각자 활동 중이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산물은 충남친환경농업협회(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시군 친환경농업협회(시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역할 분담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 일반관행 농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군의 생산자 조직화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조직화가 되지 않으면 전국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렴한 주산지로부터 들어오는 공급이 주류로 형성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관행 농산물은 지역농협 및 시군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있으므로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
- 일반관행 농산물이든, 친환경농산물이든 광역 물류·유통은 광역 조직이 맡고 시군 물류·유통은 시군 조직이 맡는 것이다. 단, 광역 및 시군 조직 간 보완관계를 원칙으로 역할을 조정, 통합하는 논의가 조직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식

● 위탁운영 방식

- 하드웨어 소유주체는 충청남도, 하드웨어 운영주체는 광역 민간단체 연합체이거나 특정시군 등 여러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 위탁운영을 맡긴 충청남도는 운영팀 조직(5~7명, 도 인력지원 파견), 재산관리(토지, 건물), 예산지원, 사업지침 마련, 운영팀 지원, 통합관리플랫폼 구축과 운영, 시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연계·컨트롤, 작부체계 구축, 대도시권 시장개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탁 시 운영책임자는 민간 전문가로 선정하고 몇 가지 조건으로 협약 혹은 정식 계약하도록 한다.
- 각 시군에서 연에 매년 5천만 원 씩 각출, 도에서 1억 원 매칭하면 연간 약 8.5억 원
- 8.5억 원이면 소프트웨어 사업에 필요한 인력 5~7명과 행정인력 2명 정도(도 파견공무원 2명) 기타 운영비 정도는 가능
- 위탁운영을 의뢰받은 사업주체 대상은 주로 특정시군, 수탁업체(광역 민간단체 연합체, 농협 등 생산자단체)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센터 시설장비 위탁관리, 재산관리, 물류유통센터 실무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단점으로서 ① 특정시군에 위탁하면 해당시군 입장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셈이고 직접 운영에 부담을 느낀 해당시군은 민간 수탁법인에게 재위탁을 할 가능성, ② 타 시군과의 연계성과 네트워킹 등 한계점 존재, ③ 해당시군 농산물을 우선순위로 취급하게 되어 타 지역 농산물과 역차별 논란에 직면 가능성, ④ 민간 수탁법인은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중요시하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낮은 타지역산 농산물을 취급할 가능성, ⑤ 행정에서 일부 기능을 보완하더라도 전문성 확보의 측면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
- 위탁운영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① 수탁기관 대표자를 시군 대표자가 선출, ② 주요한 의사결정에 시군 대표자 참여 보장 및 정보(매입, 매출 등 회계 전반) 공개, ③ 정관에 상기 내용을 가진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명시, ④ 위탁운영 계약 시 지역농산물 의무사용 명시하는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충청남도가 위탁운영을 맡기더라도 운영 주도권을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유는 물적기반 소유권은 부여군, 운영권 위탁운영을 부여군이 하게 되면 충청남도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부여군도 다시 민간에 재 위탁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충청남도는 운영권 주장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 100% 민간위탁은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 직접운영 방식

- 운영방식은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의 대다수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방출자출연에 의한 공사, 공단, 공공위탁인 재단법인 형태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 이유는 첫째, 시군 센터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기관(단체·법인)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책추진의 주도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고, 둘째, 학교·공공급식의 공공조달체계 구축은 민관 협치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특히 복지시설의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을 위해서는 공익성에 기반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체계가 신뢰성과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직접운영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인력 채용으로 민간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을 위한 일정기간의 육성·지원 요구,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의 민관 협치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 이 중에서 적절한 조직형태는 행정주도의 출연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하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행정안전부 재단법인 설립지침과 동향을 보면, 많은 지자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로 통과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과정을 매우 신중하게 이행하는 추세라서 충청남도 내부적으로 철저한 논의 및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 공동운영 방식

- 운영주체를 공동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다. 만약 도나 특정시군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예측된다면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 공동운영은 충청남도와 특정시군이 적자 및 흑자 발생 시 적자 보전과 흑자 분배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충청남도가 일정 부분 운영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해당시군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책임과 권한을 나누고 필요한 비용에 대해 공동 부담하는 방식, 적자 비율 보전, 흑자 수익 배분비율까지 정한다.
- 이러한 경우는 운영비용 보전에 대한 범위 및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책임소재 여부를 따지게 될 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운영비용 보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도 넘어야 할 관문이다. 조례가 있다면 가능하나 조례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충청남도가 위탁운영(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려면 법적 근거로서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충청남도 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운영비 보전

- 운영수익은 현재 상황에서 ① 친환경유통사업(광역 친환경유통 법인체의 위탁사업일 경우, 충남 및 서울·경기·대전 등 급식과 대형 마트, 온라인기업 등, 직영사업일 경우는 충남도내 학교 및 공공급식 등), ② 전처리 가공사업, ③ 직매장 및 하나로마트 등으로컬푸드 직거래사업, ④ 인증 및 교육사업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관리비, 인건비 등에서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는데 당분간 공공 재원으로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성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익성의 균형보다는 사회적 가치, 공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센터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적자와 이익의 경계선 지점(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운영 과정이 핵심이다.

6)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원확보 방안

● 재원확보방안① : 지방교부세 활용

- 185억 원 규모의 센터 건립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은 현재로선 없다. 그렇기에 충청남도지사 재량의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여군(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H/W 건립명목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전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도비와 군비 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도비 60-70% 이내, 군비 20-30% 이내로 해서 입지 선정된 지역과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²¹⁾

● 재원확보방안② : 균형발전위원회 포괄보조사업 활용

- 균형발전위원회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율계정 중 시도편성에서 “삶의질향상” 유형의 포괄보조사업 항목으로 신청한다.
- 충남 도내 지역 간 먹거리 불균형,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 불균형 해결 등을 목적으로,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공모에 응한다.

● 재원확보방안③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물류기능 대체방안

- 만약 충청남도가 185억 원 규모의 센터 건립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광역 물류기능 대체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즉, 충남 내 거점단위(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V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로 구분하여 기존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광역 통합물류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활용하는 방안이다.
- 부여군이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입지로 선정되면서 북부권, 서해안권역에 있는 시군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센터 운영비로 연결되는 지점), 농민들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소득 및 경영안정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우려하고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 따라서 거점단위 지정하는 방안은 통합물류 집중화로 인한 수수료 상승 및 운영·관·리·유·지·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시군별 사업역량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낭비라는 비판으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 부여군을 남부권 거점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하는데 부여군 남면의 선정된 입지에 거점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60억 원 이내의 규모로 축소하여 지원한다. 이유는 60억 원 이내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대상이기 때문이다.
- 나머지 북부권과 중부권 거점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지정하는데 기존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 리모델링과 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21) 자료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 부여군수 접견결과(2020.10.21.), pp.2-6.

- 따라서 위와 같이 물류기능 대체방안을 하였을 경우, 총 예산 규모는 100억 원 내외로 조정하고 예산 분배는 다음과 같다.

· 남부 거점(부여군) 센터 건립 : 60억 원/1개소 × 1개소 = 60억 원

· 북부 및 중부 거점 센터 건립 : 20억 원/1개소 × 2개소 = 40억 원

● **재원부담 주체=소유권=운영권 일치화 필요**

- 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충청남도가 주로 확보하되 물적 기반은 충청남도가 소유, 운영비용 부담은 충청남도과 부여군이 공동분담하게 되면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정책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원부담의 주요 주체, 소유주체, 운영주체는 일치화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 (2020년 하반기 논의과정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었던) 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충청남도가 일부 보조하는 방식, 물적 기반은 부여군 소유, 운영비용 부담을 충청남도가 분담하는 구조는 맞지 않다.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정책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정책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4. 조직 및 운영주체 구상방안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직구성²²⁾

- 우리사회 풀뿌리 무상급식의 확대는 학교급식의 사회적 가치(교육-친환경 로컬푸드-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고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조달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지역사회 먹거리 거버넌스 단초를 만들었다. 충남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월등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쌓고 있는 광역지자체이다.
- 지역단위 학교급식운동과 거버넌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먹거리 보장 관점의 정책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관점 정책을 융합하는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융복합 조직구성은 필수이다.
- 국가 먹거리통합전략과 법적 기반(먹거리기본법)에 근거한 민관 협치 먹거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행정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 먹거리 통합 플랫폼(정보 및 콘텐츠) 역할을 수행한다.
- 특히 광역 조직은 시군 먹거리보장과 선순환을 위한 지역 먹거리통합전략 수립 지원과 실행지원 체계로서 시군 먹거리위원회와의 연계망 강화, 시군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의사결정은 민관 거버넌스 방식을 지향하고 운영은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추진 조직은 주도적이면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충청남도 행정은 측면지원 및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 전문가를 운영책임자로 고용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행정 파견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 지속성, 일관성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 행정 내부의 융복합 조직구성을 통한 통합적인 연계·협력 추진이 필요한 이유는 먹거리와 관련한 행정부서가 식품 생산·진흥(농식품부), 수산물 생산·유통(해수부), 식품 안전관리(식약처), 건강·영양관리(복지부), 학교급식 관리(교육부), 물·음식폐기물(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된 현실이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업부서 통합이 전제되어야 민간 단위 및 15개 시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업추진 시 동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관 거버넌스인 통합먹거리위원회도 사업추진체계 준비를 전제로 해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충청남도 도지사 직속의 먹거리위원회(민관 협치 기구)를 구성하되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 실질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
- 광역과 기초의 역할과 기능을 먹거리 관련 영역별(생산-가공-유통-소비-복지-교육-폐기) 조직관리, 먹거리 물류관리, 먹거리 정보관리, 먹거리 정책과 사업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조정한다. 충청남도 내 먹거리 사업(생산, 가공, 유통, 소비, 마을, 복지, 교육, 재활용 및 재이용,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 있는 통합 전담부서를 구성하되 TF형

22) 자료 : 강마야(2019), 제4장 충청남도 지역먹거리 전략, 2019년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 : 지역먹거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p.170-172.

태로 우선 구성하여 역할과 기능을 확정하고 최소한 팀장 1명과 주무관 3명을 배치한다. 충청남도 도지사 직속의 먹거리 정책관을 배치하여 통합 전담부서가 추진동력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 민간과 행정의 가교 역할, 도지사 수시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주체**

-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가 기후 및 먹거리위기 시대 먹거리기본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과 맞다. 기업의 이윤중심 시장 확대 보다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먹거리 소비의 형평성 확대 측면에서는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공공적 운영체계가 중요하다.
- 하지만 현재와 같이 먹거리통합정책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는 시점에 운영주체를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광역 센터의 역할과 기능, 현재 시점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후 운영주체의 선정기준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 이후에 공모를 통하여 이에 부합하는 운영주체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광역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에 있어서 운영주체이자 실행주체로서 정책의지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 (2020년 하반기 논의과정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었던)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을 추진하는 센터이므로 특정시군(입지 선정 시군) 단위가 하드웨어 소유주체 및 운영주체가 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다. 공모과정을 통해 부여군이 입지 선정된 것이지 부여군이 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즉, 광역 사업체 위치를 부여군으로 선정한 것뿐이지 운영방식과 운영주체는 충청남도가 결정하는 것이다.

● **운영조직 형태(안)별 검토(〈표 16〉 참고)²³⁾**

- 조직운영방식은 크게 행정직영, 민간보조, 민간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운영조직 형태는 행정직영(지방정부 산하조직인 공사나 공단), 공공위탁으로 볼 수 있는 재단법인(지방정부 출자·출연조직 조직),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는 제3섹터(지방정부 민간위탁인 협동조합, 사단법인, 농어업회의소 사업지원부서 등)로 구분한다.
- 운영조직 형태별 공통적인 가치와 기준은 공공성·공익성, 관리운영 투명성, 능률성, 독립성, 민주성, 성과측정 용이성, 안정성·지속성, 연계성·효과성, 재원조달, 전문성, 조직운영, 책임성, 합리성, 효율성(비용, 운영) 등이다. 이들을 고려한 후 운영조직 형태

23) 자료 : 1. 강마야(2020), 충남 농업·농촌정책을 위한 통합형·협치형 민간위탁조직 설치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충남농촌지역 정책융복합과 중간지원조직 연속세미나, CNI세미나 2020-033,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 강마야(2019), (가칭) 충남 농촌활성화재단 설립방안 기초연구,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3. 김용렬·김태곤·허주녕(2014),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 한국 농업의 6차산업화와 정책과제, FANEA Symposium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27-131.

를 결정해야 한다.

- 운영조직 설립의 핵심성격과 기본원칙은 공공선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①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 여부, ② 주민수요를 현장 밀착성 있게 반영하는지 여부, ③ 민관 협치 가능 여부, ④ 업무의 융복합성과 통합성 충족 여부, ⑤ 연계성 확보 가능 여부, ⑥ 조직자체의 독립성 확보 여부, ⑦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 ⑧ 조직론 한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 운영조직 형태에 따른 장단점 비교 결과에 의거하여 모든 운영조직 형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사전 고려사항을 염두에 뒴다. 즉, ① 각종 조직폐해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 꼼꼼한 설계, ② 통합 전 운영방식, 규정 및 급여체계 통일, 통합로드맵에 대한 철저한 구상, ③ 행정조직의 통합선행, 강력한 행정조정기구 또는 통합회의, ④ 사무 위탁 혹은 보조 여부 판단, ⑤ 도지사의 책임, 행정능률성, 적정성, 책임성 등에 이바지하는 지 여부이다.

〈표 16〉 운영조직 형태에 따른 장단점 비교

| 구분 | 행정직영(지방정부 산하 공사공단) | 공공위탁인 재단법인(지방정부 출자·출연) | 민간위탁인 제3섹터(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
|---------------|---|--|--|
| 근거법령 | 자치단체 조례 | 민법 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 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
| 운영주체 | 자치단체 | 공익법인 | 민간법인(단체) |
| 설립상황 경우의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수익원 개발 필요한 경우 · 지자체가 임명권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할 경우 · 관련 시설물 관리 전문성 중요할 경우 · 시설물 관리업무가 많을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므로 출연금 기반 목적사업 추진이 목적일 경우 · 설립주체의 의지가 강력할 경우 · 정책수요자 수요가 높을 경우 · 업무 특성 상 공익적 기능과 역할 수행에 적합할 경우 · 조직운영 및 경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구성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단, 수탁법인의 역량과 제도 문제 관련) · 출자회원 및 정책수요자들의 자발적 수요가 높을 경우 · 출자회원 및 정책수요자의 책임성이 강할 경우 · 참여자 간 협치 수준이 높은 경우 · 민간에서 자발적인 조직구성원과 자본금 확보가 용이한 경우 · 정치적 난항을 겪을 경우(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 및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 · 재단설립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안정적으로 마련된 경우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신뢰성 확보 · 관리·운영 비용 낮음 · 정책 주도성·일관성 높음 · 시군 센터와 연계성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주도의 정책방향과 일치 · 센터장 임명, 경영평가 관리 가능 · 공공성 확보 및 수혜대상 확대 가능 · 관련 영역 간 융복합 활동 용이 · 연계성, 효과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 · 타 사업과 연계 및 사업 확장 용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의사결정 · 높은 효율성 확보 가능 · 사회적 제 주체 참여보장 ·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행정조직 비대화 방지하여 효율성 확보 가능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책임이 낮음 · 직원 전문성 결여(순환인사) · 사업운영의 경직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의 역량 중요 · 의회와 갈등 상존(성과 창출) · 자립 시까지 지원 필요 · 조직 운영 시 조직 비대화 및 관료화 성향 보일 수 있는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어려움 · 효율성으로 공공성 확대 부족 · 자치단체장 조정·통제 어려움 · 고용 및 수익확보 불안정으로 조직 |

| 구분 | 행정직영(지방정부 산하 공사공단) | 공공위탁인 재단법인(지방정부 출자출연) | 민간위탁인 제3섹터(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
|---------|--------------------|--|--|
| | | | 전체 안정성·지속성, 책임성, 조직 운영 측면에서 우려 · 조직설립 목적과 성과달성 한계 |
| 사례 | 없음 |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전주 푸드통합지원센터 ·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 | · 세종 로컬푸드 주식회사 ·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 |
| 단점 극복방안 | | · 소규모 재단법인은 오히려 비효율적이어서 검토 부적절하지만 유사한 사업 통합기능 수행하는, 적정 규모 재단법인 설립 바람직 · 재단 설립 단계에서 관료화 현상 발생에 따른 차단 장치를 사전에 제대로 마련(예, 규정 및 규칙 등 디테일에 신경, 조직의 경영성과지표를 정책지원 및 실무사업형 법인 이므로 이에 맞게 재설계, 도민의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 등을 중점 반영) · 센터 설립 초반에 지역 내 이해도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지역사회 의 높은 합의 수준을 전제 · 설립자 의지 관건인 만큼 정치적 결단 필요(충분한 명분, 타당성 확보 공감대 형성과정 필요) · 행정조직개편(도와 시군)과 업무협조체계 정비, 민간출연을 유도하여 민간 통제도 강화 · 자체사업 외에도 수익사업 일부 병행하면서 자체 수익원 확보 중요 · 위탁사무인지 아닌지 판단 · 위탁운영방식 결정(공공의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 실현) | · 일반적인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관리에 대한 다소간의 법규개정(가격 기준, 대가기준, 업체 선정방법 등) 필요 · 지방정부 민간위탁인 비영리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형태는 고용불안정과 수익확보 불안정 등과 관련한 재원조달과 전문성 측면에서 단점이 있기에 보완할 대안 마련 필요 · 안정적 운영 기반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 관건, '정책적 인큐베이팅' 관점에서 수탁법인의 성장과정 지원 · 위탁법인은 민간 조직관리 역량 등을 갖춘 비영리 기관 및 단체 존재를 전제로 함. 사전에 각 지원센터 별 운영 및 지역 네트워크 지원능력 전제, 법인의 역량과 경험 축적 필요, 다양한 조직을 담아낼 수 있는 수준의 조직 구성 전제 · 민간위탁 제도 개선 : 위탁수수료 인정, 위탁기간 5년 보장, 상근자 채용 가능한 인력의 집중 양성, 민간법인의 높은 업무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수익성 확보 해결 · 잦은 이직은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축적 불가, 지원조직 기능 저하 |

자료 : 1. 전라북도(2020), 전북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안).

2. 강마야(2020), 충남 농업·농촌정책을 위한 통합형·협치형 민간위탁조직 설치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충남농촌지역 정책융복합과 중간지원조직 연속세미나, CNI세미나 2020-033,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pp.14-15.
3. 강마야(2019), (가칭) 충남 농촌활성화재단 설립방안 기초연구,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pp.44-55.
4. 최용선, 성태규, 김진영, 전지훈, 임다정, 박춘섭, 목소리(2019),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청양군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5.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9),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재단법인화 검토(내부자료).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시행 2019.9.17.).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 2019.9.26.)
8.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2018), 2018 2차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자 교육과정 교재.
9.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2018), 충청남도 민간위탁 대상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충청남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0. 행정안전부 공기기업지원과(2017),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11. 지방공기업법([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7호, 2017. 10. 24, 일부개정] 중 제2조 적용범위).

주 : 조직형태별 장단점 내용은 이하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 정리한 것임.

● 운영조직 형태(안)별 핵심성격(〈표 17〉 참고)

- 운영조직 형태별 핵심성격은 앞서 살펴봤던 내용을 토대로 공공성·공익성, 주민수요반

영, 민관 협치, 융복합·통합성·연계성, 조직의 독립성, 지속가능성 등 6개로 구분하였는데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된 상태이므로 추후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 공공위탁 재단법인은 공공성·공익성, 민관 협치, 융복합·통합성·연계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강하다. 충청남도가 우려하는 지점은 재단 설립 후 과도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우려로 인해서 재단보다 운영팀만 존치하는 방안, 재단법인에 의한 운영체계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 충청남도과 부여군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안도 있다.
- 민간위탁 제3섹터로서 사단법인은 융복합·통합성·연계성이 강하고 공공성·공익성, 민관 협치, 조직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중간 정도, 주민수요 반영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약하다.
- 이 중 충청남도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재단법인 또는 시군 연계한 출자기관 등을 통한 공공성 및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출연조직인 재단법인, 지방정부 민간위탁 등을 우선 논의대상으로 하고 공사 및 공단은 공공성·공익성 측면에서는 강하지만 나머지 측면에서는 약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 17〉 운영조직 형태별 핵심성격

| 조직형태 | 조직성격 | 조직운영 기반 | 핵심성격(강 ●, 중 ◎, 약 △) | | | | | |
|---------------------------------|------------|--|---------------------|------------|----------|-------------------|------------|-----------|
| | | | 공공성 공익성 | 주민수 요반영 | 민관 협치 | 융복합 통합성 연계성 | 조직의 독립성 | 지속가 능성 |
| 행정직영(지방 정부 산하 공사·공단) | 지방공공기관 | 사업개발 통한 수익창출 수익영역 불명확, 지자체 소유 시설물 등 위탁(대행)관리 | ● | △ | △ | △ | △ | ◎ |
| 공공위탁인 재단법인(지방 정부 출자·출연) | 도 출연기관 | 도 출연금 기반, 목적사업 추진 | ● | ◎ | ● | ● | ◎ | ● |
| 민간위탁인 제3섹터(협동조 합, 사단법인 등) | 민간 출자조직 | 수익 및 보조사업 수행 통한 비용 보전 | ◎ | △ | ◎ | ● | ◎ | △ |

자료 : 1. 강마야(2020), 충남 농업·농촌정책을 위한 통합형·협치형 민간위탁조직 설치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충남농촌지역 정책융복합과 중간지원조직 연속세미나, CNI세미나 2020-033,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p.18.

2. 강마야(2019), (가칭) 충남 농촌활성화재단 설립방안 기초연구,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p.59.

주 : 1.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 시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행함. ① 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 ② 행정안전부 1차 협의 → ③ 설립타당성용역 발주 및 용역실시 → ④ 행정안전부 2차 협의 → ⑤ 협의결과 공개 및 조례제정 → ⑥ 농식품부 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등기

2. 연구용역 추진(의무사항)은 ‘기본계획’, ‘설립타당성 검토’ 분리 가능함.

● 특이사항

- 최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농업6차산업센터를 통합하여 새로

은 조직형태를 구상하고 있는데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도 어떻게 합류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 시각에서는 농식품유통과의 먹거리 영역을 통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과 같이 물류 및 배송 기능 포함 시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 영역과 결합 시 협력적 통합은 가능하나 먹거리 업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적, 기능적 통합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 참고 : 전라북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검토의견(전라북도 사례)²⁴⁾

-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실행체계로서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컨트롤타워 기능은 필요하나 센터 설립 형태, 운영주체, 조직운영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조직형태는 ① 민간위탁, ② 재단법인 설립, ③ 전라북도 직접 운영 등이 있는데 이 사항 또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센터 운영은 광역 및 시군 먹거리통합전략 활성화를 위한 공공형 운영조직이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은 ① 시·군 공공급식센터 컨트롤 타워, ② 시·군 먹거리통합지원, ③ 도농교류 활성화, ④ 식-농 교육, ⑤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⑥ 기획생산·물류체계·통합관리·연구지원 등이다. 물류기능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가급적 하드웨어 구축은 지양한다는 계획이다.
- (1안)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 정책기획 및 조정업무는 도 푸드플랜팀에서 수행하고 시·군간 수급 조절과 같은 기능적 역할은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 (2안) 재단법인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행정파견·민간채용)

24) 자료 : 전라북도(2020), 전북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안), p.2.

05 결론

● 종합결론

-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먹거리통합정책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은 시군 먹거리통합정책이 일정 수준 안정화 궤도에 올랐을 때 광역 먹거리통합정책도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 단계적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 민관 거버넌스 기구의 위상 복원, 사업초기 2~3년 간 소프트웨어에 집중(시군별 역량강화, 실태조사 등)하고 향후 통합물류와 유통 등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한다.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같은 하드웨어(물류유통 관련 시설 등) 이슈는 시군의 진행 정도에 따라 차후 통합, 조정, 보완 관점에서 논의한 뒤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그리고 재원부담 비율, 토지와 건물 등 물적 기반 소유권, 운영권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하고, 운영권 중 일부 사업기능을 위탁하더라도 전 과정에 걸쳐서 충청남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 소유권과 운영권(앞서 제시한 “주요재원-물적기반 소유권-운영권(주도권)-운영방식-운영비 보전 등”항목)은 주체 측면에서 모두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민관 협치 운영-조직 및 예산 등 각종 기반 확보-조직화된 생산자 및 시민 양성”도 일치해야 한다.
- 결국 충청남도의 광역먹거리통합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결단력, 도정 방향과 목표설정이 관건이다.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요약(〈표 18〉 참고)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광역 먹거리 통합관리 플랫폼으로서,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의 컨트롤타워 실무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능과 역할을 구분한다.
- 즉,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민관 협치를 기본으로 하되 기획생산 및 작부체계 지원 등에 주력하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통합물류 체계 확립 및 지역 내 유통흐름을 관리하는 것에 주력한다.

〈표 18〉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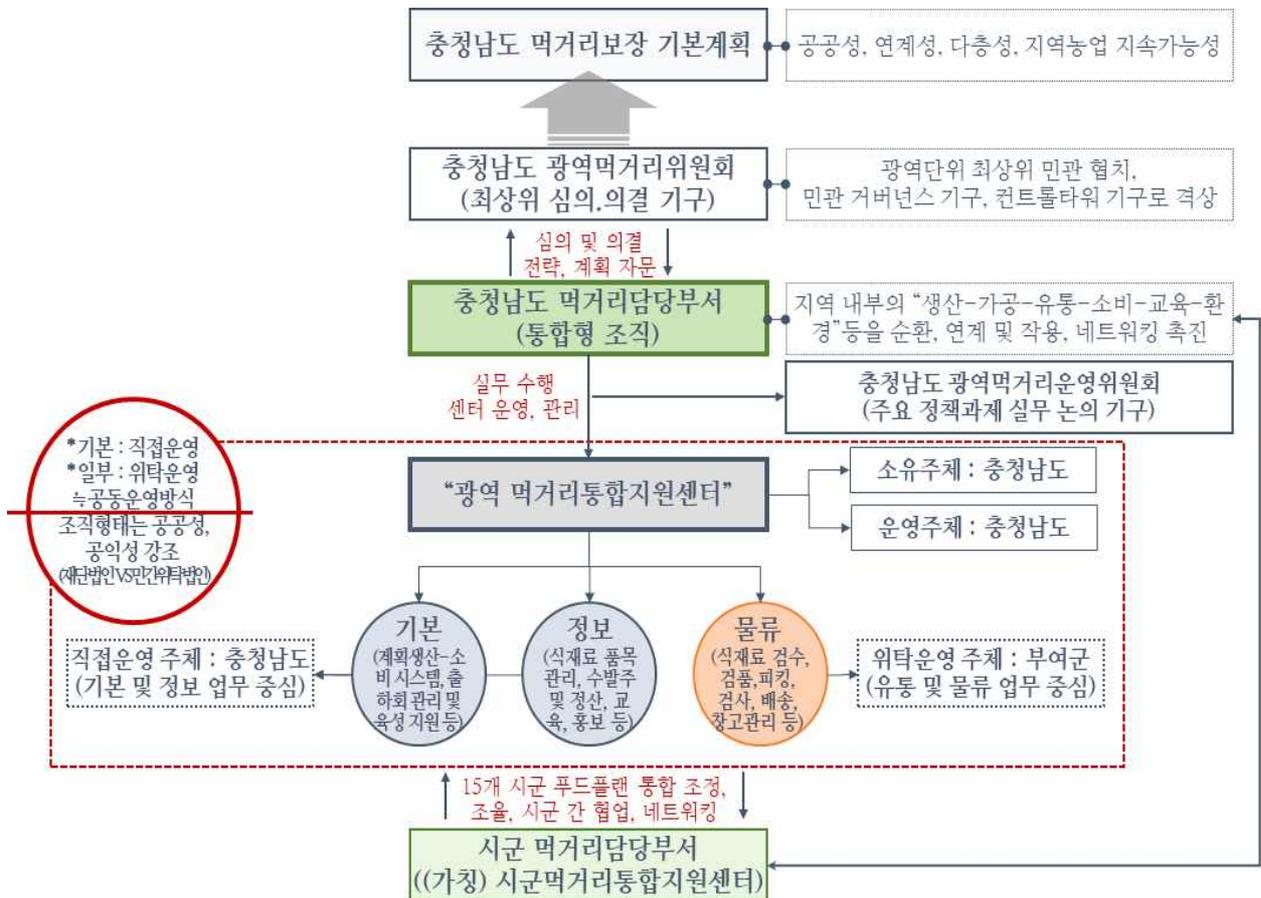
| | | | |
|------------------------|--|----------------------------------|------------------|
| 업무 추진순서 | ① 먹거리 민관 거버넌스 기구의 위상 복원 ② 사업초기 2~3년 간 소프트웨어 집중(시군별 역량강화, 실태조사 등) ③ 향후 통합물류와 유통 등 하드웨어 추진 | | |
| 구분 | 주요 기능과 역할 | 담당 부서(안) | |
| 충청남도 광역먹거리위원회 | 광역단위 최상위 민관 협치, 민관 거버넌스 기구 15개 시군 먹거리통합정책 컨트롤타워 기구 | 충청남도(기획조정실) | |
| 충청남도 먹거리 담당부서 | 지역 내부의 “생산-가공-유통-소비-교육-환경”등을 순환, 연계 및 작용, 네트워킹 촉진 | 통합형 조직* 운영위원회 가동 | |
|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 S/W (기본, 정보) | 민관 협치, 민관 거버넌스 기구 관리 및 운영 | 농업정책과 |
| | | 시군 간 기획생산 촉진 및 통합 작부체계 구축 지원 | 식량원예과 |
| | | 충남 내 지역 간 수급조절 및 가격조절 | 식량원예과 정보화담당관 |
| | | 학교 및 공공급식 관련 정보시스템 고도화 | 농식품유통과 정보화담당관 |
| | | 시군 간 정보공유와 네트워킹 | 농식품유통과 정보화담당관 |
| | | 다양한 정책지원과 더불어 중복사업 사전 조율 | 농업정책과 |
| | |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시장 확대, 관계시장(공공급식) 창출 | 농식품유통과 |
| | | 먹거리 시민교육 체계 구축 | 공동체지원국 충남교육청 |
| | H/W (물류) | 먹거리 복지체계 강화 | 보건복지실 |
| | | 대상자 맞춤형 먹거리 인권 강화 | 보건복지실 |
| | | 통합물류체계 확립 | 농식품유통과 |
| | | 지역 내 유통흐름 관리 | 농식품유통과 |
| | | 먹거리 안전성 시험·분석·관리 | 농식품유통과 |
| | | 교육·체험·회의 등 소통 공간 | 농식품유통과 |
| | 소비와 홍보 공간 | 농식품유통과 | |

주 : 담당 부서는 해당업무에 적합한 부서명을 저자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고 통합형 조직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자 설명차원에서 적시한 것임에 유의바람. 나머지는 저자 작성함.

●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의 추진체계도(〈그림 5〉 참고)

- 전체적인 추진체계는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계획을 필두로 충청남도 광역먹거리위원회회를 최상위 심의 및 의결기구로 설정한다.
- 그리고 충청남도 먹거리담당부서(통합형 조직)가 중간허리역할을 하는데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리 등 실무를 수행한다.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실무급 논의 기구인 광역먹거리운영위원회회를 구성, 운영한다. 그리고 통합형 조직임을 강조한다.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소유주체와 운영주체는 모두 충청남도가 되고 기본적으로는 직접운영 방식을 취하되 일부 기능에 한해서 부여군에 위탁운영 방식을 채택한다.
-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조직형태는 먹거리라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므로 재단법인 혹은 민간위탁법인 방식을 채택한다. 단, 이것은 타당성 검증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림 5〉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의 추진체계도



● 향후 과제²⁵⁾

- (단기) 첫째, 충남 먹거리통합정책(푸드플랜)에 대한 내외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먹거리 민관 거버넌스 기구 구성을 통해서 먹거리순환체계 기본 틀을 마련하고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일반인에게 ‘푸드플랜’이란 용어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므로 먹거리통합정책 중요성과 필요성 공감에 더딜 수밖에 없다.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되어야 제도 기반, 인적 기반 구축 등 이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기에 가장 먼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 먹거리통합정책 교육 및 다양한 도민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 시군 먹거리통합정책 수립 지원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 (지속) 둘째, 충남 먹거리 지역별 생산기반 구축, 생산자조직화 점검 및 정비가 중요하다. 먹거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먹거리 생산 기반이 튼튼해야 그 이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단기) 셋째, 충남 먹거리 순환과 먹거리 보장 관련 조례 등 제도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2019.04.10.제정)’ 이후 먹거리 기본계획 내용을 포괄하는 ‘충청남도 지역식품순환체계를 통한 도민 먹거리 인권보장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거나 혹은 기존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기본현황으로는 현재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정책 관련 조례는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시행 2019. 12. 30.제정)’가 유일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한 내용은 없다.
- (중기) 넷째, 충남 먹거리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인적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사업을 융복합해야 하므로 행정과 민간 추진체계 정비,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조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 (중기) 다섯째, 충남 먹거리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기존 사업과의 통합, 연계 조정이 중요하다. 기존 먹거리 사업은 부서별 유사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통합, 연계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사업 또한 많을 것으로 보인다.
- (중기) 마지막으로, 제도 기반 구축과 인적 기반 구축이 완성된 이후에 물적 기반 수요가 필요할 때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역먹거리 소비확대를 위한 물류허브 및 플랫폼을 구축한다. 광역 통합물류와 통합조직 구현을 위해서 충남 내 15개 시군 생산자 조직이 작부체계부터 출하계약 단계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식재료 물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함이 우선이다. 즉, 물류 기반 구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오히려 더욱 시급하다. 예를 들면, 중소농·가족농 조직화 및 작부구축, 기획생산 확대, 지역 원재료 사용 가공품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 광역 및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 공공급식 기관별 급식비 단가 현실화(로컬푸드 현물급식 적용) 등이다.

25) 자료 : 강마야(2019), 제4장 충청남도 지역먹거리 전략, 2019년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 : 지역먹거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p.165-173.

주 : 시간범위로서 단기는 2021년~2022년, 중기는 2023년~2025년, 장기는 2026년~2030년을 의미함.

〈국내 문헌〉

- 강마야(2019), (가칭) 충남 농촌활성화재단 설립방안 기초연구,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 강마야(2019), 제4장 충청남도 지역먹거리 전략, 2019년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 : 지역먹거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강마야(2020), 충남 농업·농촌정책을 위한 통합형·협치형 민간위탁조직 설치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충남농촌지역 정책융복합과 중간지원조직 연속세미나, CNI세미나 2020-033,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강마야·김기홍·서환석(2017),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 운영계획 등 연구용역,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강마야·이도경(2020), 충남 농정 거버넌스 체계 실태 사례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김기서(2020), 건강하고 효율적인 충청남도 무상급식 운영·관리에 대한 제언, 충청남도의회 제11대 제321회(정례회) 제1차 5분발언 회의록(2020.06.10.).
- 김오열(2020), 서면자문 의견서.
- 김용렬·김태곤·허주녕(2014),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 한국 농업의 6차산업화와 정책과제, FANEA Symposium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라북도(2020), 전북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안).
- 최웅선·성태규·김진영·전지훈·임다정·박춘섭·목소리(2019),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청양군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9),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재단법인화 검토(내부자료).
- 충남연구원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2020),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광역푸드지원센터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의견서(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0800, 2020.11.13.).
- 충남연구원(2020), 논의과제별 서면자문의견서,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문가&행정과의 간담회 발표자료(2020.11.19.).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공공급식 수요기관 및 급식인원 조사 결과(총괄, 2020년 9월~10월 조사).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 부여군수 접견결과(2020.10.21.).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 설명자료,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문가&행정과의 간담회 발표자료(2020.11.19.).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결과보고 : 주체별 발언 회의록(2020.09.07.).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T/F 회의자료(2020.09.03.).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의견조회 결과(총괄, 2020년 9월~10월 조사).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 2020 농정 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회의 (참고6)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의 검토의견.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2020), 푸드플랜 수립·먹거리센터 추진 점검결과(자체 조사자료).
- 충청남도(2017), 2017 충청남도 민관 협치 우수사례집.
- 충청남도(2018), 3농혁신 백서 2011~2018 제2편.
- 충청남도(2019), 농어업인 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2019년 3농정책위원회, 회의자료집.
- 충청남도(2020), 제121차 충청남도 실국원장 회의(2020.12.21.). * 대외비 자료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2018), 2018 2차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자 교육과정 교재.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2018), 충청남도 민간위탁 대상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충청남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2017),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법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 2019.9.26.)
- 지방공기업법([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7호, 2017. 10. 24, 일부개정] 중 제2조 적용범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시행 2019.9.17.).

〈언론〉

- 대전일보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44962(검색일자 : 2020.10.21.)